

트럼프 행정부 경제·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대응방안

2018년 4월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이 준 희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 훈련기관명 : 노스이스턴대학교 기업가정신교육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D'Amore -
McKim School of Business at Northeastern University
3. 훈련분야 : 트럼프 행정부 경제·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대응방안
4. 훈련기간 : 2017년 5월 3일 ~ 2018년 5월 2일

목 차

I. 서론	1
II.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및 평가	7
1.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7
2.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7
III.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국 대응현황	40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40
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46
3.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54
IV. 우리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72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72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7
V.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97
1. 경제 전반의 대응방향	97
2.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105
3.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22
[참고 문 헌]	145

I. 서론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세상 사람들의 확신에 가까운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별다른 지지기반이 없었던 트럼프의 당선은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그의 돌출적 발언만큼이나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의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는 기존의 정치 관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냈으나 동시에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의 행동과 공약들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양립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정책적인 흐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세계화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의 분노가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Brexit) 역시 이들 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뉴노멀 시대의 화두라 불리는 고용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경제적인 위험요인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증하듯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좌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영국보다 먼저 유럽연합 탈퇴 논의가 이루어졌던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 연합세력인 시리자(Syriza)가 정권을 장악하였고, 스페인에서는 출범 1~2년 만에 급성장한 포데모스(podemos)가 지지율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¹⁾

이른바 ‘PIGS’ 라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여전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스의 개혁안 실행은 지지부진하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사실상 0% 금리 정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막상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독일은 완전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할 필요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막상 공적 투자 확대가 시급한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미 공공 부문 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불균형이 이러한 모순의 근본 원인이다.²⁾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크게 다른 궤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대외통상 분야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존 통상협정의 재협상 혹은 탈퇴를 언급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미국 대외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련된 관세, 세

1) 최용환, 2017,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 나지원, 2017, 2017년 세계경제전망 (1)미국, 여시재(Future Consensus Institute) 이슈

금, 관습법의 제정과 개정의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만으로 폐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견지해 온 미국의 개방적 경제 구조를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주의가 과연 국가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미국 내 상품들의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국과 멕시코 수입품에 각각 45%,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했지만, 이들이 WTO에 제소하게 되면 법적 분쟁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지적재산권 위반 등에 대해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중국 역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감세, 보호무역 강화와 미국 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미국의 실물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에 여타 경제권 등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이행 강도나 방향 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일어난 트럼프의 여러 발언들은 정치적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는 정책 자체는 한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미중 양국의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가 계속되어 왔던 소재산업과 산업재 분야 전반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하기 어렵고 이들 산업에 대한 글로벌한 차원에서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생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로 대변되는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나 시장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주로 회자되는 내용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위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이다.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 산업에는 재고순환 사이클에서 재고축적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위험요인에 이를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로 인해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전 세계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공약을 줄곧 주장해 왔다. 트럼프 당

선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보호주의 회귀현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미 FTA 이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큰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와 철강업종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며 앞으로 다른 나라도 연쇄적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게 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이 일부 업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교통, 항만 등 공공인프라 확대에 1조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면, 건설업과 통신 인프라, 건설기자재 분야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의약품의 수입 개방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수출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내의 경제, 안보, 정치적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경기부진과 현실이 된 보호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 현지 투자 확대와 서비스 수출산업 육성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대미 교역 패턴에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높은 경제적인 연계성³⁾ 등을 고려할 때, 재정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대미교역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통상 등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⁴⁾

3) 미국은 우리나라의 총 수출 중 13.3%(2015년, 통관)를, 주식 및 채권 외국인 투자 중 각각 40%(16.11월말), 15%(16.3월말)를 차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우리 중소기업에 불리한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舊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종합컨대, 뉴노멀 시대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⁵⁾이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영국의 Brexit 결정 이후 EU 결속력이 약화되는 움직임이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2016년 9월)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글로벌 교역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각국의 이행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의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부간 대화통로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⁶⁾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의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김웅·최창호, 2017, 경제전망보고서(미 트럼프 새 행정부 경제정책 영향 및 평가), 한국은행, 48쪽
5) IMF는 세계 생산품 중 무역구제조치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2000년 1% 정도에서 2015년 2.5% 내외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우리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과잉인 부문에서의 무역규제가 강화될 소지
6) 김웅·최창호, 2017, 경제전망보고서(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한국은행, 59쪽

II.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

1.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개인세금 및 법인세 인하, 세계무역질서의 재설계 및 국방과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으며, 이른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⁷⁾)로 불려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강조해 오던 미국 최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보호주의를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확고히 하면서, 모든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두겠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인프라 재건 및 해외 생산 기지의 미국 내 이전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America First”로 표현되는 보호무역주의는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Buy American, Hire American”으로 표현되는 미국산 구입을 장려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 내로 들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항, 도로, 항만, 교량 등을 건설하여 미국의 자국민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 (TRADE)

7) 2017, Trumponomics, <http://www.investopedia.com/terms/t/trumponomics.asp>

미국의 대외 교역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문제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당시 내내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캠프에서도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임금을 늘리며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래 협상을 진행할 것” 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멕시코와 NAFTA⁸⁾

먼저, 멕시코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5년 6월에 입후보를 선언한 날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수입규모는 740억 달러로 멕시코로부터 미국의 최대 수입 품목이었다.

트럼프는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에 있었던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동 협정을 “이 나라에서 승인된 최악의 단일 무역 거래”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빌 클린턴 (Bill Clinton)이 1993년에 서명한 이 협정은 멕시코, 미국 및 캐나다의 무역장벽을 해소시켜 왔다.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8) 한경 경제용어사전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무역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관세를 1999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되었다.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1992년 12월 조인되었으며 추가적인 부속협정이 마련된 후 1993년 11월 미국의회의 인준이 이루어졌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에 걸쳐 각 상품별 자유화 일정에 따라 무역장벽 완화를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NA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통합의 가속화에 따른 경쟁압력에 공동 대응하고 GATT, Uruguay Round의 타결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1985년경 시행된 멕시코의 경제자유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과 세계 최대의 양자간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근을 확보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멕시코를 잠재적 시장과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멕시코 또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관세의 대폭인하와 비관세장벽의 획기적 완화, 가격 규제철폐 등 경제자유화 정책에 상응하는 대외정책 조치로서 이 협정에 참여하였다.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순식간에 힘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NAFTA는 협상국의 단순 통보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1993 ~ 2015년 사이 멕시코에서 수입된 상품의 명목 가치는 643% 증가한 2,964억 달러를 기록했다. CPI를 사용하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결과는 353%였다. 미국은 2015년에 멕시코에 6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9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는 NAFTA의 재협상이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국가이든 협정국은 협정 제2205조에 따라 6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⁹⁾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미국이 서명했지만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12개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 조약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거의 무효화 되다시피 하였지만, 이 이전에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에 트럼프는 상징적으로 그 협상을 철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중국을 배제한 TPP는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재조정”의 경제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내 주요 경쟁상대인 버몬트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9) 위키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7년 현재 참여국은 11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제적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 협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힐러리 클린턴도 그 조약에 대해 재검토 약속을 얻어낸 바 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¹⁰⁾이라는 대안 형태의 16개국 무역 협정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고 있었다.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자국이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위안화페 가치의 절하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한다고 중국을 비난해 왔다. 중국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평가절상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10월에 3.1조 달러로 2014년 3월에 비해 거의 4조 달러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수출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12월 국가무역협의회(National Trade Council)의 설립을 발표하면서 반 중국 경제학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로 하여금 그것을 이끌게 했다. Navarro는 “중국에 의한 죽음 : 용과의 만남 - 세계적인 행동 촉구”와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 : 그들과 싸울 곳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10) 트렌드지식사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16개국 정상들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 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협상의 최종적인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협상 주도권, 개방 수위를 놓고 참가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AN은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상품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낮추는 특별대우를 원하고 있다. 아세안은 협상 분야도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 논의도 협상이 확대될지도 미지수다. 한국은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 폭을 놓고 힘겨루기도 해야 한다. RCEP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애초 RCEP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 블록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디딤돌로 RCEP를 받아들였고 미국 주도의 TPP를 견제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RCE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argeted Intervention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동안에 트럼프는 민간의 개별 회사들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2016년 11월에 그는 포드자동차 회장인 빌 포드(Bill Ford)에게서 전화를 받기도 했다. 포드는 링컨 공장을 멕시코가 아닌 켄터키에 유지할 것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PR¹¹⁾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의 당초 계획은 루이빌에서 포드 이스케이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링컨 생산을 멕시코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United Technologies Corp.(UTX)의 자회사인 Carrier와 협상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Carrier는 2016년 11월에 인디애나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 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1,100명이 넘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NBC 계열사인 WTHR은 730개의 공장 현장 일자리와 70명의 사무직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디애나에 있는 또 다른 Carrier 공장은 700개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보낼 계획이었다.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였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10년 동안 7백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그룹 (TYO)의 CEO인 마사요시 손(Masayoshi Son)이 “기업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는 마사(Masa)는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2017년 1월에 멕시코에서 1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한 포드사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도 했다. 대신 미시간 주에 7억 달러를 투자하여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마크 필드(Mark

11)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National Public Radio), 미국 전역의 797개 라디오 방송국에 배급되고 있는 미국 공영방송으로, 1967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공공방송법에 따라 1970년 2월 비영리 재단으로 출범

Fields)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에서의 자동차 생산이 40%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성장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TAXES)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세제 개혁안을 요약본을 브리핑했다. 이 세정개혁안이 통과된다면 1986년 이래 처음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경제 성장 및 미국 고용을 위한 세제 개혁 -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개인 및 사업세 삭감 -

세제 개혁의 목표

-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부담스러운 세금 코드 간소화
-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 가정에 세금 감면 제공
- 사업 세율을 세계 최고 수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경감

개인세제 개혁

-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 가정의 세금 감면 :
 - 7가지의 과세등급을 10%, 25%, 35%의 3가지 등급으로 감축
 - 표준 공제액 배증
 -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비용이 있는 가족에게 세금면 제공
- 단순화 :

- 가장 부유한 납세자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세제혜택 삭제
- 주택소유 및 자선 기부금 세액공제 유지
- 법인대체최소세 폐지
- 상속세 폐지
- 중소기업 및 투자소득에 물렸던 3.8% 오바마케어 세금 폐지

사업(영업)세제 개혁

- 15% 사업 세율
- 미국 기업을 위한 경기장을 수평하게 하는 속지세금체계
-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조 달러에 대한 1회 과세
- 특별 이익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 폐지

절차

- 5월 한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하원과 상원과 함께 대규모 세금감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세무계획을 조율하여 상·하 양원을 통과시킬 계획

이 발표문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시한 세제개혁 계획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의 제시한 세제개혁안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시한 세제개혁안은 현재 7개의 과세 등급을 3개로 줄이고 이를 연방 소득 및 양도 소득세에 적용하였다.

이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공동신고자에 대한 표준공제 금액이 12,600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된다. 항목별 공제금액은 공동 신고자에게 20만 달러로 제한되는 데 단일 신고자의 경우 반으로 줄어든다. 이 개혁안은 가구주의 소득공제와 기초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1.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분류

Trump plan tax brackets			
Joint married filers	Single filers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Up to \$75,000	Up to \$37,500	12%	0%
\$75,000 to \$225,000	\$37,500 to \$112,500	25%	15%
Over \$225,000	Over \$112,500	33%	20%

Source: Tax Foundation

이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트럼프가 “death tax” 라 일컫는 증여세와 재산세가 폐지되는데 사망할 때 까지 부과하는 1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던 개별 자선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게 된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트럼프 선거공약에 따라 35%에서 15%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기업들이 세금 10%로 해외에서 올린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새로운 송금세 제도를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 대비 해외 수익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현금을 내보내고 법인 전환을 통해 세무 기준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은 기업 이자비용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자본투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을 갖게 된다.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의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성벽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1월에 트럼프는 성벽을 즉각적으로 건설할 것을 명령하고 국토안보 장관인 존 켈리(John Kelly)에게 이 공사의 시작을 위해 연방예산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성벽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선거공약 중의 일부는 240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에 대한 송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Patriot Act를 개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변인은 멕시코 정부가 성벽 건설 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7년 1월의 행정 명령에서 트럼프는 예산 집행 기관들에게 인도주의 및 군사기금을 포함한 멕시코에 대한 모든 원조를 확인하여 이들 자금들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전문가는 멕시코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1년에 10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벽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성벽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하나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환경 및 기타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전기 그리드 및 전기 통신 시스템의 개선 및 고속도로, 교량, 항구, 공항 및 파이프라인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한 것들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한 적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Keystone XL과 Dakota Access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파이프라인 건설시에는 미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건설

해야한다는 규정은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성이나 무역규칙 위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1조 달러 투자

트럼프는 향후 10년간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지출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출규모는 “수익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8월에는 채권을 통해 8,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에 대한 비용조달 아이디어를 발표한 바 있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영역이나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에서 나올 것이고 그동안 관행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지출을 없애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적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국가 부채를 없애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익 중립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Healthcare)

트럼프는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고 대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제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저축 계정(HSA)의 사용 확대, 블록 보조금을 통한 메디케이드¹²⁾ 자금 지원, 주 경계선을 넘어선 보험판매, 약물 수입, 고위험 풀 구성, 엄격한 이민정책을 통한 비용 절감, 환자가 세금 환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

트럼프가 제안한 대다수 공약들이 “Empowering Patients First Act“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2009년 2월에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된 Tom Price에 의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번 소개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사를 소송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법안이다.

12)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국민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965년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

Obamacare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은 폐지노력을 계속했다. 취임 1주일 전에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다수결로 건강법의 대부분을 폐지하고 미 하원은 즉시 결의안을 승인했다.

취임 첫날,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가족, 보건의료 제공자, 건강 보험자, 환자, 의료 서비스 수혜자, 건강 보험 구매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수수료, 세금, 벌금 또는 규제를 행하는 모든 법안의 조항이나 요구 사항의 이행을 포기, 연기, 면제 또는 연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미국 건강 관리법

2017년 3월 하원 공화당은 AHCA(American Health Care Act)라는 법안을 Obamacare를 대체할 법안으로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공화당으로부터 가장 비판 받아온 Obamacare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들지 않고 나머지 고객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이 만료된 개인보험 재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에 30%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또한 5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사업체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AHCA는 2020년까지 자비지출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보험료 보조금이 교부되는 방식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6,500 달러(연방 빈곤수준의 175%) 수준인 21세의 납세자는 현행법에 따라 세금 공제를 통해 3,400 달러를 받는다. 보조금을 2,450 달러로 인하하는 공화당의 제안에 따라 1,450 달러를 모두 지불할 것이고, 이는 현행법 하에서는 1,700 달러가 된다.

같은 소득을 가진 64세의 여성은 현행법에 따라 13,600 달러의 보험

료를 받게 된다. AHCA 하에서 그들은 4,900 달러를 받았다. 즉, Obamacare 하에서는 1,700 달러를 지불하던 것에 반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14,600 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68,200 달러(빈곤층의 450% 수준) 수준인 64세의 납세자는 일정한 보조금을 받고 이들 수준의 연령과 비교하여 40%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15,300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표 2. 오바마케어 대비 건강관리법 : 비영리단체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

Obamacare vs AHCA: subsidies for nongroup health insurance				
Individual with \$26,500 annual income (175% poverty level)				
Current law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21 years old	\$5,100	\$3,400	\$1,700	
40 years old	\$6,500	\$4,800	\$1,700	
64 years old	\$15,300	\$13,600	\$1,700	
AHCA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Change
21 years old	\$3,900	\$2,450	\$1,450	-\$250 (-15%)
40 years old	\$6,050	\$3,650	\$2,400	+\$700 (+41%)
64 years old	\$19,500	\$4,900	\$14,600	+\$12,900 (+759%)
Individual with \$68,200 annual income (450% poverty level)				
Current law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21 years old	\$5,100	\$0	\$5,100	
40 years old	\$6,500	\$0	\$6,500	
64 years old	\$15,300	\$0	\$15,300	
AHCA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Change
21 years old	\$3,900	\$2,450	\$1,450	-\$3,650 (-72%)
40 years old	\$6,050	\$3,650	\$2,400	-\$4,100 (-63%)
64 years old	\$19,500	\$4,900	\$14,600	-\$700 (-5%)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

보험 적용, 보험료 및 적자에 대한 영향

CBO가 2017년 3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AHCA에 의해 2018년까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 수치는 2026년까지 2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2024년에는 총 5,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일 것인데, 이 수치는 Obamacare에서 2,8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의 상당부분은 개인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포기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한 환자의 선택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이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면 보험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초기에는 현행법보다 높지만 10년 이내에 약 10%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CBO는 Obamacare 또는 AHCA가 건강보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연방 적자가 2017년에서 2026년 사이에 AHCA 하에서 약 3,3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참고]

오바마 케어¹³⁾

개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부른다.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 여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

오바마 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이민자
-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
-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시, 소득의 8% 이상을 소비해야 해서 "벌금"에서 제외된 가족들
-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
- 의료 보험을 구입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국민들

비판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정부 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서비스 수준의 저질화를 가져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오바마 케어 이전부터 뉴욕 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코자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무료 혹은 저가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을 맺어 사업 허가를 내줬었는데, ACA로 확대된 메디케어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주민들(뉴욕의 경우 빈곤선의 138%에서 150%)은 잘 써왔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오바마 케어로 생겨난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한 직장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중소득층 주민들 역시 오바마 케어시행 이후 짊어지게 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주치의가 있는 중산 계층 미국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당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의사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전에 내던 금액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기존병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보험 고유의 성격을 훼손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당뇨에 걸린 상태에서 당뇨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오바마케어가 한도 끝도 없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제(REGULATION)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취임과 함께 2017년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새로운 규제 하나가 생길 때마다 두 개의 규제를 폐지하도록

13) 나무위키 백과사전

했다. 또한 2017년 9월 30일로 끝나는 2017년 회계 연도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폐지된 규정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증가된 규제에 의한 비용의 합이 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관련 규정의 폐기는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트럼프는 또한 오바마에 의해 행해진 모든 위헌적인 집행 조치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오염과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규제에 특히 비판적이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2010년의 금융규제 법안인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도 없이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단 세 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찬성한 채로 통과된 법안이었다.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이 법안은 너무 복잡할뿐더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말하면서 은행들이 소비자 예탁금으로 위험한 투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Volcker Rule¹⁴⁾을 재확인 했다.

이주(IMMIGRATION)

트럼프는 2015년 6월에 대통령직에 입후보할 것을 공표할 때부터 이민정책을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 “그들은 마약과 범죄를 가져왔고 강간범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에 성벽을 쌓고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미등록 부모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연방

14)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책으로 2010년 7월 15일 도드 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다.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이 규제는 은행이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이 법률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처음에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 했고 2015년 12월에는 “미국의 대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는 무슬림의 완전하고 완전한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입장을 약간 선회하여 외부 범죄인을 추방할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수는 2백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는 또한 이슬람 이민에 대한 금지 조치를 다시 취하면서 “테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부터” 이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입국심사”를 요구했다.

멕시코

트럼프는 2017년 1월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 국경에 성벽을 즉시 건설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금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위 말하는 “포획 및 석방”과 “망명 신청”에 대한 종식을 명령했는데 가석방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상당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고용동결의 예외조치로 추가로 5,000명의 국경 수비 대원을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는 관련 부서에 “모든 이주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이민법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 복지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남용하려는 사람들을 최우선하여 가려내도록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어떤 공공혜택을 의미하는지 또는 남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한 법무부 장관인 Jeff Sessions이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서류 미비 이민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이다.

중동

2017년 1월에는 트럼프는 120일 동안 난민의 입국을 막는 한편 시리아로부터의 난민을 무기한 추방하고 이민자이건 비이민자이건 7개의 이슬람국가로부터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했다: 예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이 금지령은 전국의 공항에서 신속히 시행되었으며, 수많은 시위자들의 시위를 유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들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한 가운데 4개 주의 판사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과는 반대로 체포된 사람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2017년의 난민승인을 오바마 행정부의 당해 연도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소수민족이며 종교적 박해에 직면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는 트럼프가 약속한 일련의 무슬림 금지조항의 일환으로 기독교인에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대다수의 시아파 이라크에 있는 수니파에 적용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해 “인격살인“과 같은 성 기반 폭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에 의한 테러혐의와 유죄 판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가 범한 범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채(NATIONAL DEBT)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거의 20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에 대해 거둬 비판하면서 향후 8년 이내에 부채를 없앨 수 있다고 공언했다. 부통령 토론시간에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 경제성장 전략으로 달성 가능한 3.5%~4.0% 성장으로 회복되면 국내외 수요를

맞출 충분한 재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국가 부채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세금을 인하하고 인프라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정책은 부채에 수조 원씩을 투입하는 행위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너지(ENERGY)

도널드 트럼프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사기극(hoax)” 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개념은 미국 제조업을 비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인에 의해 그리고 중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셰일, 석유, 천연 가스, 청정 석탄 등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50조 달러에 달하는 생산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한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작업 재개를 요구하는 일련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트럼프는 파이프라인을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한 범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자국 내 건설자재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트럼프 대변인은 2017년 5월 파리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취소하겠다고 까지 했다. 이 협약은 미국, 중국 및 109 개국이 지구 온도 증가를 이전의 산업 평균 수준보다 평균 2°C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협약한 것이다. 취임 100일 계획에 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취소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미국의 물과 환경 기반 시설을 고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

트럼프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일관성이 떨어졌다. 2015년 8월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저금리 기조로 “거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리인하가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온건파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자넷 옐런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9월에는 그는 다시 저금리 정책을 비난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클린턴 장관보다 더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준비은행은 최대한의 고용율(4.5%~5%의 실업율)과 안정적인 물가(연간 핵심 PCE¹⁵⁾의 인플레이션 2%)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연준이 정치적이라는 트럼프의 비난은 과거 대통령들처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2016년 12월까지 미네아폴리스 연준 회장이었던 Narayana Kocherlakota는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가 1979년 이후부터 대통령의 절제로 유지해온 FRB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미국 법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 예산(BUDGET)

2017년 3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2018년 재정예산 제안의 첫 번째 단계인 “Skinny Budget“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국방부 자금을 10% 수준인 523억 달러를 증가시킨 5,270억 달러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예산(12.6억 달러/16.2%) 국무부 산하 USAID가 운영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 예산(109억 달러/28.7%) 및 기타 프로그램 예산의 절감분을 활용한 것이다. 자유재

15) 개인소비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PCE) :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합계. 내구재·비내구재를 불문하고 모든 재화 구입이 포함된다. 실제의 계산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구입비는 제외되며(고정자본 형성에 포함), 현물지급은 원가로 평가하여 가산되고, 농가의 자가소비·자가용 주택의 임대료 등을 평가하여 계상하는 등의 조사가 행하여진다. 개인소비지출의 동향은 경제성장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어떤 소비항목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언제부터 늘어날 것인가, 또 개인소비의 신장 형태에 변화는 없는가 하는 것 등은 수요예측의 중요 항목이다

량에 의한 임의지출 예산의 전반적인 수준은 27억 달러 또는 0.3% 수준이 감축된 1665억 달러로 감소한 규모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은 EPA의 예산을 31.4% 수준을 줄인 규모이다. 노동부와 농업부는 이 예산안에 따라 예산규모의 1/5이 축소된다. 또한 공공방송공사, 무역진흥기구, 전국예술기금, 무주택 협의회 등 19개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된다.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이러한 예산안들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산업계 및 주식시장 반응

산업계의 거장 Honeywell¹⁶⁾의 CEO인 Dave Cote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낙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급성장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트럼프의 성장전략은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이후 수많은 대·중소기업 CEO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기업가 정신에 큰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종래의 기업가적 태도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우리도 함께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태도였으나 이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자를 늘릴 때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미국 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te는 “우리는 일종의 불꽃이 필요했다. 그 불꽃은 선거로 인해 발생한 변화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승리 이후 미국 경제를 돌파구로 여긴 것은 Fort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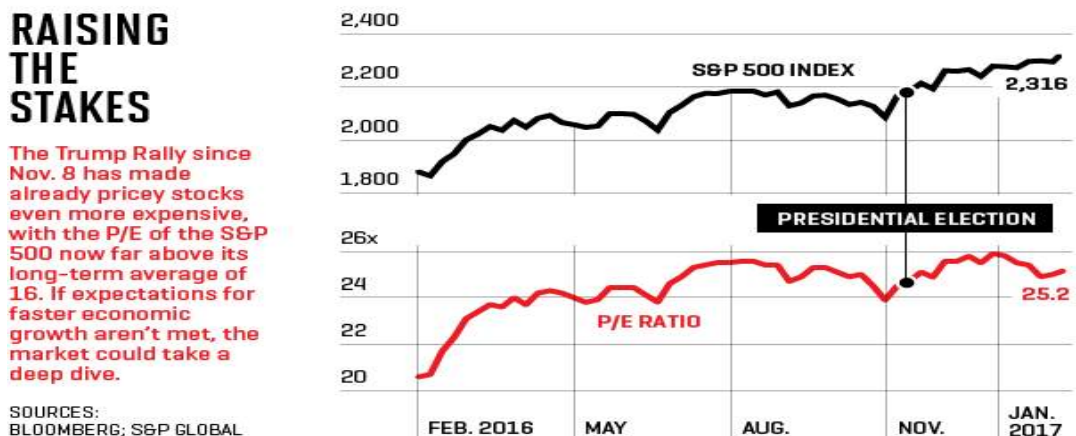
16) 세계 최대의 컨트롤시스템 메이커로 글로벌 자동 제어기기·전자통신시스템 장비 제조회사로서 ▲우주항공 ▲자동화 제어 솔루션 ▲운송 ▲특수소재 사업 분야 등을 영위

500대 기업 CEO들만이 아니었다. 중소기업들의 낙관론도 급증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¹⁷⁾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조사결과 ‘16년 11월부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주의 비율이 12%에서 50%로 38%p 뛰어 올랐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곳은 역시 주식시장이었다. 큰 규모의 트럼프 랠리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이 기업의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선거일 이후 S&P 500 지수는 8% 이상 상승하여 약 1조 4천억 달러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졌으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역사적인 20,000 임계치를 돌파하여 상승을 유지했다.

시장 랠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최근 2년간의 2%에서 3~4%로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초기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망치지 않고 규제와 조세감면을 시행할 수 있으면 어느 전문 경제학자의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과거 저명한 통화정책 전문가로서 Reagan의 고문을 담당했던 Allan Meltzer는 “가방 안에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으나 매우 잘못될 가능성도 훨씬 많다.

그림 1. 대통령 선거 전후의 S&P 500 지수와 주가수익비율 비교



17)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협회로서 회원사가 사업체를 소유·경영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그의 플랫폼의 핵심요소가 훨씬 어두운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무역이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그 상대국에게 쌍방이익이 되었던 무역국경 개방을 되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잠재적으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9 개국과의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취지에서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자유무역 협정을 벌써 파기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의제 중의 하나인 세금 및 규제 부분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자들도 무역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 20%에서 45%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하는 양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를 크게 줄이려는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 행동 포럼 (American Action Forum) 총재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회 예산 국장을 역임한 Douglas Holtz-Eakin은 “트럼프 행정부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역 전쟁이다.” 라고 우려의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성향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가혹하다고 할 만큼의 반이민법적인 태도는 농업 및 건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미국에서 몰아내거나 추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R&D에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 및 프로그래머를 위한 비자를 제한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재 전쟁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백악관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언행들은 미국 경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급하게 시행되는 무슬림 금지는 특히 민주당 의원을 격분케 함으로써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고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공화당이 의회의 양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의제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법률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 부과금 감면에 따른 자금조달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아직 승인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국경 조정세(BAT)”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일부는 이미 주요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폐소화 가치를 달러 대비 10%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자동차 부품에서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미국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수출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상반된 정책과 비정형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월스트리트의 일부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인 Bridgewater Associates의 창립자인 Ray Dalio는 선거 직후 LinkedIn에 대한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퓰리즘적 정책이 초래할 피해가 다른 정책의제들을 압도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2017년 2월 초에는 골드만삭스도 고객들에게 선거 직후보다 시장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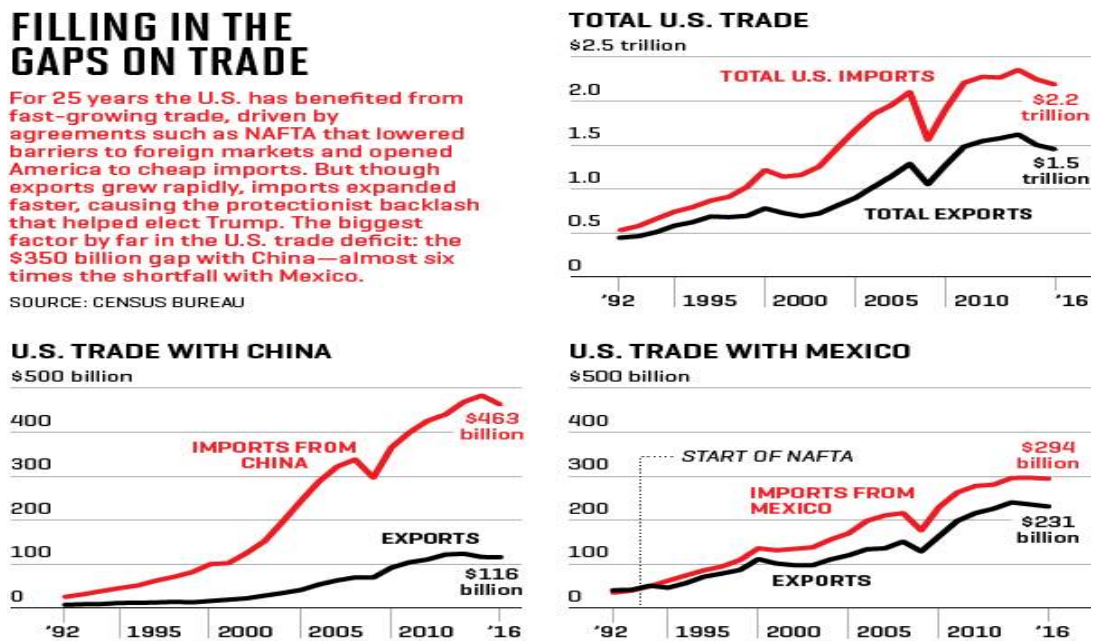
행정부가 아직은 출범 초기 단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이 통치방식을 재정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속된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출범초기에 약속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을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지금 당장은 그가 공언하고 있는 정책 아젠다에만 집중할 도리밖에 없다.

향후 미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자유무역주의나 보호무역주의 어느 쪽이 지배적인 쪽이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역의 대변동은 규제와 세금개혁으로 인한 모든 잠재적 이득을 상쇄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좌진들도 무역에 관한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월버 로스 상무 장관과 피터나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이 보호 무역주의자 쪽인 반면에 스티브 유인추틴 재무 장관과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인에 이어 오랫동안 2인자였던 게리 코언(Gary Cohn)은 자유무역협정을 훼손하는 것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멕시코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그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 2. 미국의 무역현황 / 對중국 무역현황 / 對멕시코 무역현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은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무역거래 협상은 매우 긴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면 미국은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는 비교적 적은 양보로 나름대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정책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트럼프가 GDP에서 3~4%의 일관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밖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의 경제학자이자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에 대한 비판자인 게리 후프 바우어 (Gary Hufbauer)는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현실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의 정책 아젠다를 보다 구체화 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2016년에 1.6%대의 경제성장을 물려받았으며 2009년 중반의 깊은 경기 침체기 이후 평균적으로 2.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이 4.9%에 불과하고 지난 7년 동안 경제가 1,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같은 수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구직활동을 그만 두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적은 규모의 고용가능 인력풀과 노령인구가 미국을 2% 정도의 GDP 성장률에 멈추게 하는 뉴노멀 시대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의 견해로 볼 때 로드 블록은 “자본 투자의 부족입니다. 그들은 오바마가 은행, 에너지 및 제조 분야에서 값 비싼 많은 규제를 통해 비즈니스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CEO는 위험을 회피하고 현금을 축적하는 방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미국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성장 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다시 활기를 불어 넣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설비투자 및 기술 혁신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임금과 고용이 향상된다. 동시에 부담스러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설비 투자 재개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의 세 가지 큰 경제정책은 법인세 개혁, 규제개혁 및 인프라 투자이다.

법인세 개혁

먼저, 트럼프는 기업의 법인세를 급격히 낮춤으로써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35%라는 연방 법인세율은 통계적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실제로 미국 기업은 실효 세율이 다른 선진국의 정상 세율에 훨씬 가깝다는 점에서 많은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개혁은 GDP를 크게 끌어 올릴 잠재력이 있다.

규제개혁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개혁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에너지산업, 은행 및 제조업을 괴롭히는 값 비싼 레드 테이프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먼저, 오바마 케어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트럼프 정책 아젠다 전체의 축소판이다. 행정명령보다는 시장을 우선시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건전한 정책이다. 그러나 언제 시행할 지의 문제와 트럼프가 제안할 세부 사항에 대한 모호함은 환자와 보험사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와 하원의장 Paul Ryan은 ACA를 대체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주장하지만 공화당과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체 법안이 도입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가 Obamacare를 통해 보험 혜택을 얻은 2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 범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ACA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보험 제도에서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Obamacare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등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만 가입하고 회복하자마자 보험가입을 중단하는 환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트럼프 케어가 그들의 사업을 망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CA 하에서, 미국의 국립병원들은 훨씬 더 많은 유료 고객을 확보하고 비보험 치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 혜택과 메디케이드를 통해 노인과 빈민층의 급여를 크게 삭감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Obamacare가 폐지되고 Medicare 및 Medicaid 지급액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 병원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는 현존하는 연방 규칙의 75%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만도 수년간의 공청회와 소송이 있었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트럼프는 장래에 어떤 행정부 기관이나 부서가 한 개의 규제를 신설할 때는 과거의 두 개의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추가되거나 철회된 규정은 OMB¹⁸⁾에 의해 집행될 규칙의 총

18) 미국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1970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대통령실에 설치되었으며, 예산관리 국장은 각료회의에도 참석한다. 대통령의 효율적인 행정발전 및 유지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의 조직을 관리하며, 예산관리의 감독과 통제, 법률안의 제의에 관한 각 부처별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비용에 추가될 수 없다. 그는 또한 2,596건의 비공식으로 제안된 규정에 대한 유예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와 민주당간의 협력해야할 주요 영역이다. 그러나 양측은 특히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는 대부분의 지출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있다. Ross와 Navarro는 선거운동 기간 중의 공약집에서 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870억 달러 수준인 87%의 세금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인프라 지출에서 1조 달러의 자본을 활용할 것이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소득세와 민간기업의 법인세는 전체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Ross-Navarro 계획은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도로와 교량에는 통행료 수입이 없으며, 대부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파이프라인이나 개인용 수도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고속도로, 통근철도망 및 노후 전력망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

트럼프는 BAT를 실행할 걸 것인가?

공화당의 세제개혁 중의 하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라는 복잡한 새로운 징수체계를 수반한다. 법인세 감면을 상쇄하기 위해 1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소매상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민관 협력을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공공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타협점은 미국 기업의 해외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나오는 세금수익으로 절실한 투자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멕시코와 중국 같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가 전면 부각되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수출이 줄어들고,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극단적 말과 행동은 먼 것도 국가 전체를 양극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미국 노동시장의 양극단을 위태롭게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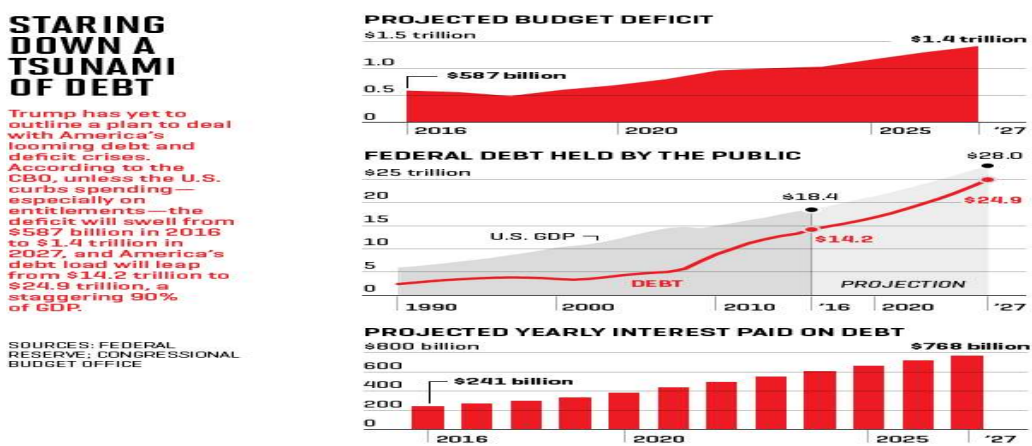
첫 번째는 국토안보부가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 보험과 같은 공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성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계통의 최고 인재 발굴원 중의 하나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전문 직종“의 외국인이 컴퓨터와 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Apple, Facebook, Google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트럼프가 이슬람 대다수인 7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금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소송를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경제정책 중 가장 위협적인 정책의 하나가 무역 정책이다. Peterson Institute¹⁹⁾의 Hufbauer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소비 구매를 종래의 5% 수준인 5조 달러를 위축시킴으로써 GDP가 1%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위축 이후에는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무역 상대국이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에는 개방되었던 무역국경이 조만간 관세라는 무역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속에 살 것이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주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왔다. 예를 들어, 멕시코로의 상품수출은 NAFTA가 1994년에 제정된 이후 259% 증가하여 2016년에 2,310억 달러가 되었다. 같은 기간 멕시코의 미국수출은 345% 증가하여 6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멕시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미국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국가 부채 및 지급이자 현황



19)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국제경제학자이자 과거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프레드 버그스타인 박사에 의해 1981년 국제경제연구소(IEE)로 출범했다. 현재 50여명의 연구원들이 국내외 주요 경제 현안에 관해 각종 분석 보고서와 저서를 내놓고 있다. 비단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경제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정치, 외교 안보 등 관련 분야에 관해서도 연구 실적이 많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 왔던 바, 이 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멕시코 또는 중국과의 큰 무역격차가 미국에 해로울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반대라는 것이다. 하버드의 이코노미스트인 Robert Lawrence는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여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옷을 교환하기 위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서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로 수입이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 자리를 빼앗아 괴로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싼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혜택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자유무역은 미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정교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게 한다. 예를 들어, NAFTA는 북미 지역에서 단일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체가 부품을 생산하고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초소형 공급체인을 권장한다.

트럼프 경제팀은 다각적인 협상을 피하고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 일대일 거래를 하고 있다. 수입 제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대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세를 통해 위협함으로써 미국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전략은 미국과의 3,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중국과는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가 정말로 관세라는 수단을 발동할 것인지 아닌 지이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빠르지는 않지만 느리게는 성장할 것이다.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는 잠재적으로 수입과 수출 모두를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35% 또는 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가 훨씬 더 불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위안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고 가장 안전한 통화는 달러화

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안전추구 경향은 달러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 있고, 미국의 수출비용과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미국의 성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경제가 무역전쟁을 피할지라도 이러한 성장전력은 단기간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빠르게 부채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몇 년 동안은 활발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CBO 전망에 따르면, 2027년까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세 배로 증가하여 7,68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이 소비하는 8달러당 1달러 수준이다. 이것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에 3.6%에 이르는 장밋빛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급증하는 적자와 빚은 현재 8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국채를 대규모로 내다팔게 되어 트럼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시급한 이슈는 트럼프가 제안한 세금 감면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 할 계획인지에 있다. 미국이 BAT를 시행하고 인프라 투자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역송금세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래의 적자가 현재 예상 이상으로 추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경기부양을 위해 2019년에 추가로 5천억 달러를 차입하자마자 적자는 곧 GDP의 5%인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Honeywell의 Cote조차도 대통령이 적자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매사업자와 연방 판사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부채 감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Ⅲ.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국 대응현황

1.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취임할 때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애널리스트, 경제학자 및 투자자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단어는 향후 12개월을 볼 때 “불확실성”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경제성장에 좋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는 경제 파탄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는 선거 이래로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미국의 성장이 글로벌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화 된 경제의 경우, 트럼프와 미국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지역 경제와 다국적 기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 Anatole Kaletsky²⁰⁾가 The Guardian에 쓴 글이다. “트

20)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 : 1952년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ECONOMIST>의 저널리즘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에 <FINANCIAL TIMES>로 자리를 옮겨 이후 12년 동안 뉴욕지국장과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THE TIMES>의 경제 분야 총괄 에디터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 통찰력 있는 예측으로 높은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다. 1996년 영국 BBC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평론가상(신문 부문)을 비롯해 영국 언론협회가 주는 ‘올해의 영국 언론인상’을 두 차례에 걸쳐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말 그대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가 약속한 무역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화당은 현재의 핵심 유권자 선거구에서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자유무역, 세계화, 개방시장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의 문을 닫거나 (또는 조금 벗어나기만 해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경제 전략을 다르게 함으로써 세계 무역 문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 감소와 연방 준비 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달러로 진 부채에 대한 서비스 비용 상승과 함께 특히 신흥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세계 GDP를 낮출 것이다

세계 경제와 미국 정치를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국제적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호주의 JCP Investment Partners²¹⁾는 국내 일자리 증가로 인한 급성장하는 미국 경제가 호주의 고용 시장을 해칠 수 있고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의 한 재정전문가는 “미국의 발전이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분명히 좋을 수는 있어도, 호주는 국내 자본 축적을 위해 외자에 의존하고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경제구조로서 새로운 경제 질서 내에서의 호주의 취약성이 더 높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호주 가계 부문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고, 그 결과 신용 여력이 줄어들고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주택 부문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성장과 소비 지출이 둔화되어 호주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1) <http://jcpip.com.au/index.php> : 1998년에 설립된 호주의 전문투자회사로서 JP Morgan Asset Management와의 합작 회사

시장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트럼프의 집권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부문도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실제로 2017년에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이 다른 나라의 무역 전쟁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을 세우지만 않으면 2017년의 세계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John Kehoe²²⁾는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기 직전 세계은행은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에서 미국 경제성장이 미국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낙관주의가 순수하게 희망에 근거한 것이며 경험적 증거나 명확한 계획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담 크레이톤(Adam Creighton)²³⁾은 호주의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가장 이상한 사실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래가 예측된다.

22) 존 키호 (John Kehoe) : <Australian Financial Review>의 워싱턴 지부의 정치·경제·비즈니스 특파원으로서 호주의 Monash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및 정치학을 공부 한 후 정책 분석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23) 아담 크레이톤(Adam Creighton) : 조세 및 재정정책 분야의 경제기자로서 Bastiat Prize를 수상한바 있으며, Wall Street Journal, 호주 연방준비은행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미 대통령 선거 직후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에 있다. 트럼프는 미국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정책인 친 기업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월 11일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 이후 트럼프의 첫 기자 회견에는 세금삭감 및 인프라 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Financial Review는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은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항 없는 상황을 주저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반을 통해 미국 시장은 들썩이면서 신중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자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를 다시 밀돌고 나서는 월가가 둔화세로 돌아섰을 때 달러가 캐나다 달러 대비 3개월 이래 최저수준까지 떨어지는 데 충분했다” 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금과 채권은 시장이 나쁠 때나 악화될 때 선택적 투자옵션이 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의 기자 회견이 끝난 후 금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자들조차도 1년 후에 그들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오프 스크립트 (off-script)로 유명해지며 겉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의약품 가격과 제약회사의 세금감면을 언급한 후, S&P 500 시가 총액 상위 9개 제약 회사는 20분 만에 약 246억 달러가 솟구쳤다.” 라고 Fortune은 보도하고 있다.

이 수십억 달러의 급락은 대통령이 단순히 산업에 대해 몇 마디 말한 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실제로 업계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트럼프의 말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낸다.

미국 - 중국 관계는 글로벌 리플 효과를 초래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중국이라는 또 다른 경제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양국 관계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일 자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하고 있다.

2016년 말 중국은 자체 수출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통화 바스켓을 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통화 조작'이라고 부른 행위로 중국은 부패한 경제를 운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 투쟁은 세계 곳곳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심지어 십자포화 선상에서 일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호주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파운드화가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좋은 소식이 있다. 일부 영국인은 영국 경제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Financial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집권이 영국 경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 25%는 트럼프의 집권이 영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 13%는 그의 집권이 영국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다.
- 21%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본질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혹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달러는 트럼프 집권 즈음에 높은 투자자 기대로 인해 2016년 말에 크게 회복되었다. 이것은 또한 경기부양과 규제완화 등의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Brexit 조건을 협상하는 어려운 한 해 동안 영국은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국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불확실성의 기간이 끝났다고 믿는다. 영국의 EU 탈출구가 확실해짐에 따라 경제 통계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파운드화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 정치 상황이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2017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²⁴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연례 평가를 발표했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위험 요인은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이다. 이는 2016년에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2017년 유럽 선거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에 영향력을 갖는 국제회의이다.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린다. 포럼은 매년 1, 2월에 개최되며,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한다.

WEF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로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비롯한 국가에서 소득자의 1%를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금융 자산 소유자를 부유하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집권이 미국 경제, 세계 시장 및 국제 관계에 대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낙관적으로 바라볼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분야인 정치 및 재정 측면조차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다. 아무도 트럼프의 말이 행동으로 바뀔 때까지는 뛰어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2.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집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된 위험 요소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은 아태 지역에 대한 하방 위협을 의미한다. 그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교역과 아시아의 안보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인정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의를 통해 보건대,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행했던 것 보다 아시아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저격수인 Navarro, Lightizer, Ross를 무역대표로 임명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과 외교,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수입 장벽이 높아지면 APAC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

더욱이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연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압박을 받아 아시아로부터의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On-Shoring²⁵⁾ 정책과 수입장벽에 취약하다.

트럼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그 정도는 낮지만 On-Shoring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행된다면, 아시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장벽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의회의 승인없이 중국의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45%의 수입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지만 최혜국대우 원칙²⁶⁾에 묶여있다. 트럼프는 경상수지 적자, 불공정 거래행위, 국가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및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다른 수입 제한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평균 MFN 관세를 초과하는 경우 WTO 협정에 따라 백지 수입관세가 허락되지 않는다.²⁷⁾

25) 온쇼어링(On-shoring):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쓰인다. 온-쇼어링은 경비절감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나 해외시장의 법규나 노동생산성, 판매조건 등이 기업의 전략과 일치 하지 않거나 국내의 투자조건이 개선되어 복귀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대 의미로서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인건비, 투자비 등 기업이 경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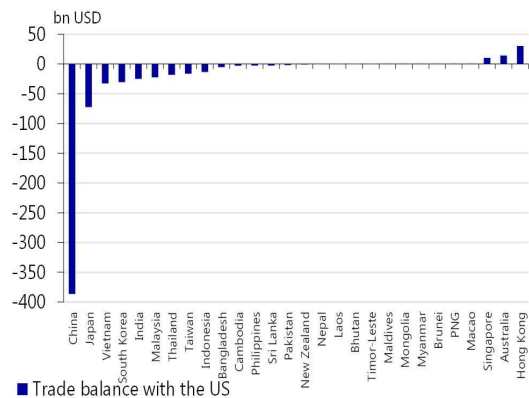
26)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무역 상대국(WTO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춤으로써 그 국가가 다른 국가에 혜택을 부여한다면, 어떤 국가가 WTO 회원이고 FTA상대국이 아닐지라도 그 혜택을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해야 한다.

27) 물론 트럼프는 미국의 WTO 가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미국 국경조정세(BAT)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인세 납부 목적으로 수입된 비용은 회사 수익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않으며, 수출에서 발생한 수입은 더 이상 기업의 총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수입에 대한 세금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BAT가

WTO 협정에 위배될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보호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공약은 중국(멕시코)을 겨냥한 것이지만 BAT가 도입되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위협에 처해진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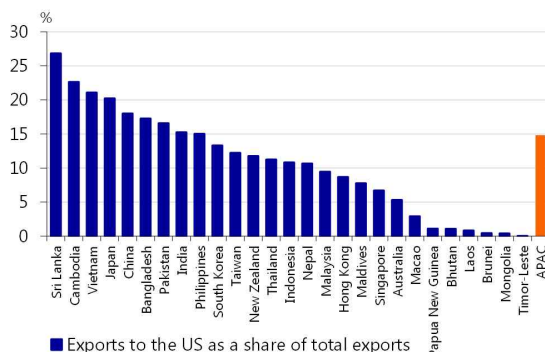
그림 4. 각국의 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



* Source : UCTAD, Rabo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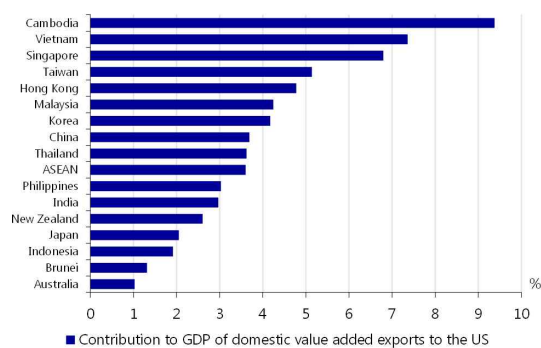
트럼프가 무역장벽을 실제로 증가시키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APAC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역은 총 수출의 약 15%를 미국으로 수출하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미국으로 더 많은 비중을 수출하고 있다(그림 5). 또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아태 지역의 많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그림 6). 이는 아시아 경제가 미국의 수요 감소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중국의 미국 수출은 국내 총부가가치로 측정한 중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GDP의 3.7%에 해당한다.

그림 5. APAC 국가의 미국으로 수출현황



* Source : UNCTAD, Rabobank

그림 6. 미국수출의 아시아GDP에의 영향



* Source : OECD TIVA, Rabobank

중국과 가능성 있는 아시아 지역의 보복

트럼프의 조치들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인 보복이 발생하면 무역이 악화될 수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수입의 28%를 차지한다. 만약 그들에게서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무역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게 영향이 클 것이다.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이기 때문에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GDP의 중간재 수출은 각각 1.5%와 1% 수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과 다른 APAC 국가들이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제품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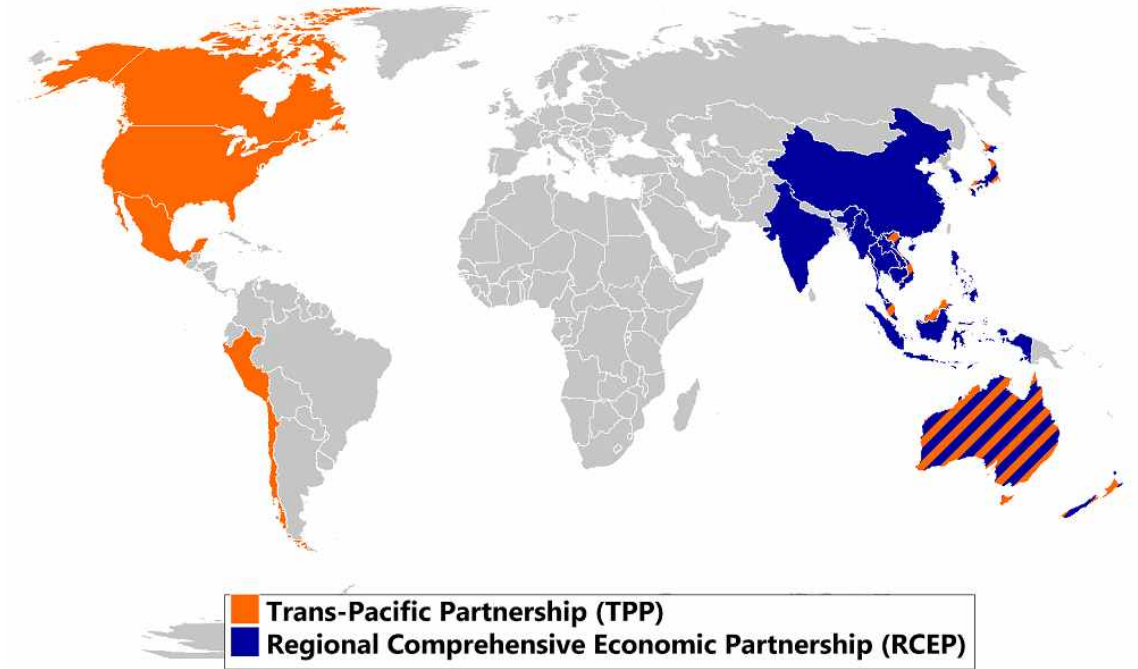
트럼프 선거의 여파로 중요한 사건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것이다. 이 무역 협정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 및 일부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그림 7), 중국은 제외하였다. 이 협정에서의 탈퇴는 이 지역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세 감면에 이어 국영기업(SOEs), 노동보호기준 및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TPP 비관세 조치는 참여국의 경제에 구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혁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TPP가 요구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법은 FDI²⁸⁾를 유치하여 전기전자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TPP가 비효율

28)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출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적인 국영 기업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는 수년간 그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득권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림 7. 초기 아시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Source : Rabobank)



트럼프 행정부의 TPP 철수로 중국은 다른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부여 받았다. 이 대안적인 무역협상은 소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²⁹⁾ 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인도, 한국을 포함 하나,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무역을 중국으로 향하게 한다(그림 7).

29) 위키백과사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총인구 30억명에 20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RCEP은 발효시 최대 인구 및 지역 범위, 최대 참여국 등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2013년 본격협상이 시작됐지만 주요 국가들이 TPP로 기울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해 일정이 늦추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국 주도의 RCEP가 힘을 받게 됐다. 이미 트럼프의 TPP 폐기 공약으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함께 TPP에 공을 들여온 일본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TPP에서 빠져있는 한국도 그동안 RCEP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RCEP는 2016년 12월1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16차 실무협상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중국은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협정에도 참여국별로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17.3월) : (제1그룹)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TPP 참여국. TPP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추구 · (제2그룹) 필리핀, 중국, 인도 등 자유화보다 조기합의를 최우선시, 중국, 인도는 자유화에 소극적 · (제3그룹)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대가로 경제협력 요구

RCEP가 TPP, 특히 RCEP의 일부가 아닌 비관세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에 언급된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트럼프의 집권은 안보위험을 야기한다.

지정학적으로 트럼프의 정책기조는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중국과의 긴장이 커질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확인과 일본 총리 아베 신조 (Shinzo Abe)와의 긴 시간의 회동을 통해 보다 부드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남중국해 침공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는 아직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토지개간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위험이 남아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남중국해를 주장하고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또한 바다의 일부를 요구하면서(그림 8), 이 국제 해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림 8.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 Source : Rabobank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선거 운동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취임 후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말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

성의 증가는 이 지역의 평화에 중요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중국의 골목이다.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안보조치 또는 남한 내 군대 주둔 증가는 중국으로부터의 강경 대응을 촉발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군국주의의 결과를 낳거나 심지어 군사적 대결이 발생하면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비즈니스 및 소비자 심리에 타격을 주며, 아마도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위험 증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관심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에 의한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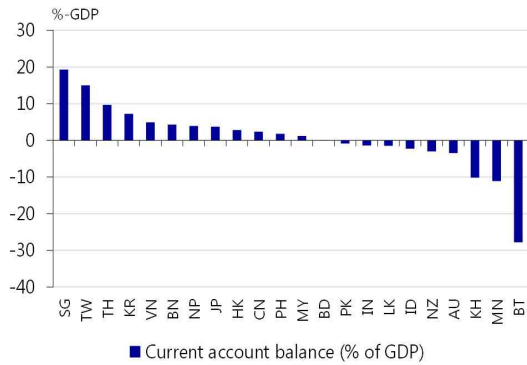
아시아 통화의 대다수는 이미 2016년에 미국 달러에 대해 가치가 절하(그림 9) 되었고, 연준은 2016년 12월 회의에서 2017년에 더욱 강력한 통화 정책에 관한 신호를 보내 미국 달러화 랠리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국가는 잠재적으로 더 강한 달러로부터 추가적인 통화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달러 관련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어) 외화 차입 당사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부채 수준은 부채가 대부분 외화로 표시될 때 (특히 미국 달러가 지배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상승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개 긍정적인 경상수지(그림 11), 상대적으로 낮은 (외생)부채, 적절한 외환 준비금 수준(그림 12) 및 보다 유연한 환율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USD에 비해 통화의 약세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다량의 외화부채가 있는 국가이다(그림 10). 또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은 아시아의 신흥 시장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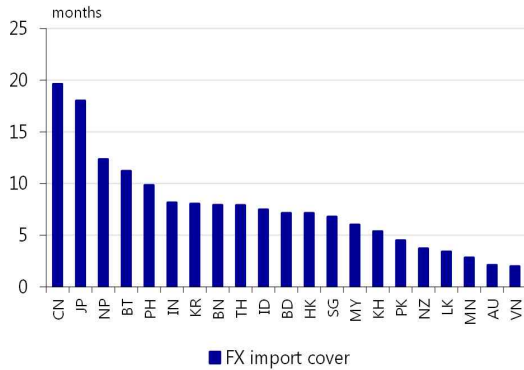
제한한다.

그림 9. 2016년 미국 달러화 대비 아시아 통화 평가절하 현황



* Source : Macro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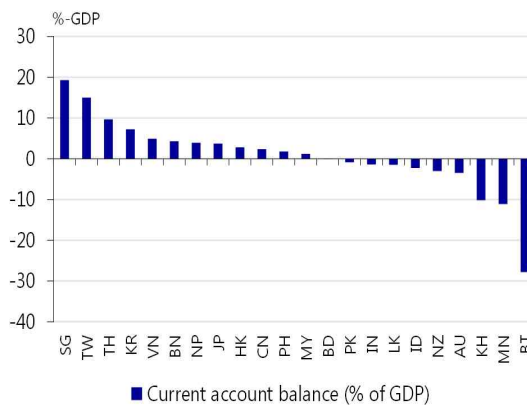
그림 10. 2016년말 현재 아시아 국가의 외화부채 현황



* Source : Macrobond

우리는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준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효과를 아시아 지역에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증재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낮은 외채 수준으로 인해 개별 국가가 포지셔닝을 잘 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Current account balances to counter depreciating currencies



* Source : Macrobond

그림 12. Import covers in FX terms



* Source : Macrobond

3.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세계 각국의 트럼프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의 경제정책 기조에 순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와 통상정책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며 그의 기조를 따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 등은 자국의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대미 강경노선을 견지하면서 압박수준을 강화하는 편이다.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對중 적자 감축을 위한 소위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對미 투자 확대, 외환자유화 등의 시장 친화적인 환율체계를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로 줄이는 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농산물 분야와 금융 등에 대한 일부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³⁰⁾’라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자국 통화를 방어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관철하려는 노력들 경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에 대한 주요 무역 흑자국 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미국이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수입관세 또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상대국을 압박할 경우 WTO 제소 등의 강경대응을

30)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

시사하고 있다. 미국이 독일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³¹⁾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마이너스 금리 등의 기존 통화정책을 변함 없이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의 양자협정도 거부하는 등의 자국의 길을 가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재협상 시에 멕시코 당국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NAFTA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중남미 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멕시코 당국은 폐소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금리인상을 통해 막고 있으나 미국 환율당국은 폐소화의 환율 불균형 현상의 시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등의 통상 및 환율정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³²⁾

표 4. 對미 4대 무역흑자국의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현황

국가	통상정책	환율정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100일 계획 추진합의 ◦ 미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 노력 강조 ◦ 일대일로 전략에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 참여를 독려 ◦ RCEP 전략을 통해 미국 TPP 탈퇴에 따른 아태지역 무역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고 1조 달러 투입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 ◦ 전인대회에서 시장 친화적 환율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31) Financial Times, 2007. 1. 31 : Germany is using a “grossly undervalued” euro to “exploit” the US and its EU partners, Donald Trump’s top trade adviser has said in comments likely to trigger alarm in Europe’s largest economy. Peter Navarro, the head of Mr Trump’s new National Trade Council, told the Financial Times the euro was like an “implicit Deutsche Mark” whose low valuation gave Germany an advantage over its main trading partners.

32) 강환국, 이정민, 김윤희 등, 2017, 트럼프 취임 100일과 美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23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협약체결 ◦ 토요타, 소프트뱅크 등 일본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발표 ◦ 유럽과의 FTA 추진 및 TPP 부활을 위한 미국설득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양적완화 중심의 통화정책은 엔화약세가 목적이 아닌 디플레이션 해소임을 강조하여 오해 해소 노력 ◦ 2013년 양적완화정책을 개시한데 이어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국경세나 국경조정세 등을 도입할 경우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시사 ◦ 미국과의 양자협정은 거부하면서 트럼프가 거절한 TTIP 재시도 ◦ 폭스바겐, BMW, BASF 등 주요기업은 대미투자를 확대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마이너스금리, 2018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 ◦ 독일 흑자는 독일경쟁력에 기초한 것으로 환율정책의 산물이 아니라며 미국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반박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도 시사 ◦ 중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중남미와 태평양 동맹국, 중국의 협력사업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및 외국인 투자이탈 방지, 기준금리 인상 등 폐소화 평가절하 압력 방지노력 지속 ◦ 미국의 통화 저평가국에 대한 시정 요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의 발언을 예의주시

중국

중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의 100일 계획에 협의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발표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대일로계획³³⁾’의 연합전선 국가

33)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R)라고 부르며, 201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최고 지도자가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철강 산업과 같이 중국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GDP는 전 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한다.(위키백과)

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뜻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다변화 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 차단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등 최근에는 시장 친화적인 환율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는 등 점진적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은 미국의 중국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형태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의 100일 계획은 미국의 농축산업 및 금융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식품의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결제 회사와 신용분석기관, 채권 보험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들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했던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환영키로 했다

대미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중국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로디움(Rhodium) 그룹이 2017년 4월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대미 직접투자액이 460억 달러(약 51조 9천억 원)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1천300개의 신규 사업을 개시했으며 미국인 14만 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했다.

리서치 업체 로덤그룹은 최첨단 IT 및 혁신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도 지난 3년간 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관련 투자는 2005년에 20억 달러에서 작년 12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로덤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신생기업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투자가 안보상의 우려를 야기 시키지만, 중국 자본은 많은 미국 IT기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덤은 만약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울 경우 중국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미국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에 협조하여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자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전략에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호주간 FTA를 개정해 농업과 인프라,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과 뉴질랜드 FTA 확대를 위한 협상도 2017년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에 세계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에 열린 ‘보아오 포럼³⁴⁾’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만을 위한 독창곡이 아닌 세계 각국이 함께하는 합창곡’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규모 생산력 및 건설능력을 해외로 보내 연합국가에 필요한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 시설 수요를 충족시켜 다양한 차원의 양자·다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통한 연선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각국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정책소통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몽골의 ‘초원의 길’ △UN의 ‘융커플랜³⁵⁾’ △호주의 ‘북부 대개발’ 등 각국과의 발전전략 공조 및 ‘일대일로’의 다차원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³⁶⁾

한편 2017년 5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고위급 인사 약 1,200명을 초청하여 「2017

34) Boao Forum for Asia(BFA) :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정부·비영리 지역경제 포럼으로 매년 4월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중하이(瓊海) 보아오(博鳌)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의 영수들이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의 아시아판으로 불린다.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발전, 인적 자본, 사회기반시설, 통상무역의 행정효율성, 거시경제 견고성 등 각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경쟁력순위를 발표한다. (두산백과)

35) 2015년 3월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대규모 장기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EU 각국이 총 3,1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함

36) 한동균,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브리핑, 7쪽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인프라 △산업투자 △경제통상협력 △에너지 자원 △금융 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해상협력 등 8개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류하여 협력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계기로 중국은 RCEP 회원국 추가 확보로 세를 넓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많은 회원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 탈퇴로 힘을 잃은 TPP의 기존 회원국이 RCEP로 갈아탈 경우 받아들일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RCEP가 타결되면 2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RCEP 협상은 참여국간 경제개발 격차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³⁷⁾에서 협상이 시작된 뒤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RCEP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과 관련해 참여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탓이다. 그러나 TPP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4년 전에 출범하여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RCEP가 부각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역풍이 부는 이 때 트럼프의 일련의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국이 무역 자유화의 챔피언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TPP 무산의 최대 피해국인 일본, ASEAN 국가들이 RCEP를 TPP를 대체할 협정으로 인식하여 신속히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결시한에 관련 공식 언급은 없으나 참여국 다수가 빠른 시일 내의 타결에 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RCEP을 통해 아태지역

37) East Asia Summit :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정상회담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협력 모색을 위한 회의이다. EAS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과 직결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ASEAN+3 회원국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등 외부 국가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중요한 정상들의 포럼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산백과)

국제적 경제 질서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위안화를 매수하는 등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6.6% 하락 하였는데, 이는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국민 외환매입통제, 중국 내 외국기업의 해외송금과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위안화 정책에 대한 화법을 바꿔 환율 정책에 대한 방침을 바꿀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³⁸⁾를 열고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하고,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정부 공작보고에서 빠지지 않았던 문구인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공작보고에서 “위안화 환율은 추가로 자유화되고,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안정적인 위치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국 당국이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움직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올해 외환시장 개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당국의 환율 정책 변화에는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가

38) 약칭 전인대(全人代)로서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 분립제에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성(省)·자치구·직할시·군(軍)이 선출하는 대표 및 각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매년 3월에 개최되며 앞서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정협 또는 인민정협)와 함께 '양회(兩會)'라 불린다.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산백과)

능성과 함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선거 등이 올해 “블랙스완”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당분간 위안화 환율에 불확실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안정될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이다.

일본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해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약속하는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대미 투자확대를 약속하는 등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또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수출경쟁력 제고 차원이 아니라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완화 목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2017년 2월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U.S.-Japan Growth and Employment Initiative)’ 라는 이름으로 일본은 미국에의 투자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미·일 양국이 협력해 ▲미국에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고 ▲향후 10년간 4,500억 달러 규모의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미국의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 공동 참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시장 창출 패키지는 구체적으로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등을 양국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4대 협력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일 양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손을 잡고 ▲여객용 대형 항공기와 ▲핵발전소 부문 등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해 아시아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대형 투자계획을 약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의 기류를 피해가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낮은 일본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차를 겨냥해 비관세 장벽(hidden barriers)을 교묘하게 쌓아 올려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해 왔다.

민간차원에서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도 앞서 2017년 12월에 트럼프 당선인을 미국 현지에서 만나 첨단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원웹(OneWeb)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며 약속의 첫 단추를 채운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유럽연합(EU)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EU간 FTA가 하나의 바람직한 자유무역의 모델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며 일본과 EU간의 FTA의 신속한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2016년도 일본과 EU는 1,245억 유로의 수출입 규모를 기록해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EU와 많은 교역을 기록한 국가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아베 신조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자유무역협정(TPP) 복귀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없더라도 TPP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미국이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TPP를 성사시켰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탈퇴를 결정했다” 며 “TPP 협상에 남아 있는 나머지 11개국은 미국이 있다는 가정 하에 TPP 가입 결정을 내

렸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최선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12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들 TPP 국가 GDP의 약 65%나 차지하는 미국이 빠지면서 덩치가 매우 왜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남은 국가들만이라도 TPP를 조기에 발효시킬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TPP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일본과 양자 통상교섭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개국이 결속해 TPP를 살려 나간다면 일본으로선 미국의 양자협상 압력을 피할 방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2013년 이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명목성장률은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측면에서도 지난 4년간 일본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앞날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책의 토대가 되는 ‘엔저’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통화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은 수년 동안 환율을 조작하고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일본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는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응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양적완화정책은 디플레이션 해소가 목적이며 엔화 약세 유도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엔고 시정을 목적으로 한 시장개입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달러 강세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

서 일본은행에 금융완화 정책을 전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융긴축이나 미국의 감세·인프라 투자 정책 등 달러 강세를 야기할 재료는 많지만, 강세를 멈출 수단이 트럼프 정권에겐 없다는 측면에서 환율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 일본에 정책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금융완화정책의 목표는 일본 인플레이션 목표 2%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에서 트럼프 정권으로서도 일본은행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일정상회담 결과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 측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환율조작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것’이라는 데 이해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독일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거부하는 반면 독일 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독일은 2016년에 사상 최고의 수출입 및 흑자를 기록하며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EC B39)는 기존 정책을 고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우선(America first)으로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표방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여러 대선 공약 발언과 관련해 각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며, 독일 역시 미국 경제 및 통상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멕시코 국경에

39)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 유럽경제통화동맹)이 발족하여 각 회원국의 개별 화폐가 소멸되자 유럽 통화정책에 관해 집단결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회원국의 통화 주권을 인수하고 유럽 공동의 통화금융정책을 지휘하는 일을 맡는다. 미국의 FRB(Federal Reserve Bank : 연방준비은행)와 마찬가지로 단기금리 조절과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2002년부터는 회원국의 금융정책의 집행권을 갖게 된다. 다만,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각국의 통화당국이 최종 책임을 진다. (두산백과)

장벽을 설치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2019년 멕시코 공장 오픈을 계획 중인 BMW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35%의 관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 독일 내 우려가 고조되었다.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보아 가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일련의 선거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취임 직후 메르켈 총리는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공동의 작업이 있다면 모두에게 최상일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질서에도 해당 된다.” 고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이 있고,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면 항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고 강조하며 타협과 상호간 존중을 강조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독일의 수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독일이 중국에 이은 트럼프의 정치적 공격 대상이 독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환율 조작과 불공정 세계 무역 및 일방적인 대미 교역으로 미국 내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고 수출 강점을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세계 수출 강국인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상대 교역국의 희생 하에 이뤄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로화가 실제로 평가 절하돼 있으나 독일이 평가 절하한 것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평가 절하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왜 이렇게 독일의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는 불만이 높은 걸까? 미국은 주요 수출입국들과 무역적자가 크다. 미국에게서 가장 큰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과 독일이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무역 불균형 현상을 만드는 것은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었다.

독일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자동차와 부품업계 (28%)이고 2위는 기타(24.2%), 3위가 기계(19.4%), 4위는 의약(11.5%), 5위가 전자(6.5%) 순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과 석유업계에 대한 애정이 높은 트럼프 입장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가져가는 거대한 이익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의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반응은 강경하다. 미국이 국경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WTO 제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에너지부에서는 WTO 제소를 통해 美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또는 국경조정세 저지가 가능하다 밝히고 있는 가운데 또한 미국이 독일 기계나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독일 제품에 높은 징벌적 수입 관세 또는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 경고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미국이 제안한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독·미 양 국간 해법 제의를 거부하면서 독일의 대미 흑자는 경제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외무부장관은 미국의 독일 철강기업인 잘쯔기터 (Salzgitter AG)와 딜링어 휘테(Dillinger Huette)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위협한 행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독일은 무역협정의 경우 TTIP⁴⁰)는 응하겠으나 미국과의 양자 협정은 거부하면서 중·일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독일과 미국간 단독협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EU의 다자간 협상(TTIP)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메르켈은 트럼프와 공식 만남에서 양국 경제에 있어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미국 내 독일 기업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독일과 미국과의 개별 무역협정은 불가함을 표명한 바 있다.

40)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 양측의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나 관세를 철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3년 2월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제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위키백과)

다른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중국 시진핑과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면 전 독일 총리 슈뢰더(Gerhard Schroeder)도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트럼프가 反중국 통상정책을 구사할 경우 유럽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EU FTA체결에 관해서는 메르켈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아시아 내 무역정책과 지역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일-EU FTA 협상 체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독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폴크스바겐, BMW, BASF 등 주요 기업은 대미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BMW도 신규 공장 설립, 5년간 2억 달러 투자, 연간 45만 대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BASF도 생산 확대를 위해 2억 5,000만 유로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바이어는 몬산토사를 인수하여 향후 6년간 160억 달러를 R&D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독일이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grossly undervalued euro)”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들의 환율정책을 줄줄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향후 이들 국가들과 추진하게 될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선언하는 등 다자간무역협정 보다는 양자 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같은 날 스톡홀름에서 가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항상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지해왔다” 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여 그러자 쇼이블레 장관이 독일은 유럽의 환율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서, 유로화 약세는 ECB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나선다. 그는 자신이 유로화 약세를 불러온 ECB의 통화완화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항변했다. 독일의 무역흑자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에 기초하고 타국 수출품에 대한 차별 또는 국가 보조금 지원 등 어떠한 조작이나 왜곡된 무역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통화정책 전망을 변경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견에서 밝혀왔던 전망들을 바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또한 그는 우리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며, ECB의 양적완화 정책은 유로존 내 경제의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멕시코

멕시코는 필요시 NAFTA 탈퇴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자국의 수출 대상국가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남미, 중국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멕시코 당국은 폐소화 평가절하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에서는 폐소화가 저평가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NAFTA의 전면적인 폐기를 언급하였으나 후에는 재협상전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정작 멕시코는 재협상의 이득이 없을 경우 NAFTA 탈퇴 및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은 ‘윈-윈’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신정부와의 대화는 5가지 전제를 갖고 실시할 것을 언급하였는 바, 이 5가지 원칙은 ① 주권보호, ② 멕시코 법 준수, ③ 윈윈관계 구축, ④ 북미지역 통합, ⑤포괄적 협상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인 멕시코는 시장 다각화를 위해 태평양 동맹국 및 중국과 협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교역대상 국가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멕시코·아르헨티나 면담 시에는 MERCOSUR⁴¹⁾-태평양동맹의 FTA 등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는가 하면 멕시코 외무부는 최근 다양한 중남미 국가 부처들과 통상협력 관련 접촉이 잦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 정부는 중국 내 식품시장 진출 및 중국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누에보레온 주는 중국계 자동차기업(미공개)과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계 자동차 OEM 기업이 멕시코 진출을 시작했는데, BAIC (Beijing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은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하고 했으며, 2017년 2월 JAC Motors는 이달고 주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을 발표하여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4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1) 메르코수르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1년 창설된 남미 공동시장이자 경제공동체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으로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나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며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조 달러로 남미 전체 국가 GDP의 52%를 차지하는 경제공동체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12월 4개의 창립 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와 교역, 인권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자격정지를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었다. 한국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를 구성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한편, 트럼프 당선 이후 페소화는 달러당 20페소이상 상승해 미 대선 이후 10% 넘게 페소화 가치가 하락했다. 리만사태 이후 멕시코 페소화는 달러대비 대체로 10~13페소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50% 정도 하락한 셈이다. 평가절하는 수출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 요인으로 멕시코 페소만 하락하게 되면 수출채산성이 개선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대미수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하락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멕시코 장기금리 상승은 멕시코 페소화 하락의 급격한 진행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정부가 외환시장개입으로 멕시코 페소화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하여 페소화 가치절하 및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및 페소화 평가절하를 막으려 노력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환율이 조작되는 경우는 물론 의도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라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범위 밖에서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멕시코 페소화를 대표적인 예로 활용하면서 멕시코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지만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U

EU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조정세 시행으로 미국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WTO 제소를 통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의 WTO 제소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트럼프와의 협상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영외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TTIP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나 미국 외에도 무역협정이 체결 가능한 수많은 국가들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EU는 현재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⁴²⁾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에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할 태도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법을 통한 법적 대응과 함께,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캐나다의 통상정책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목재에 20%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전쟁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캐나다는 EU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⁴³⁾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CETA가 발효되면 EU-캐나다간 무역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미국이 지정한 환율관찰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금리 조정 등 금융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국제 유가 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캐나다의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마찰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EU에서 협상 또는 발표 추진 중인 TPP 가입국 (8개국) :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43) 포괄적경제와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은 캐나다와 EU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캐나다와 EU간 관세의 98%가 철폐된다. (위키피디아)

Ⅳ. 우리 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트럼프노믹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나 시장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주로 회자는 내용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위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연관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발생할 경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의 경제정책의 특성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어떤 경제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은 위축되게 마련이다. 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와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주요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아직 상승하고 있지만, 정책당국과 경제연구기관·학계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안팎에 ‘불확실성의 충격’이 엄습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트럼프발 정책의 불확실성과 혼선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정치·경제적 혼돈과 급변이 ‘불확실성 시대’의 실체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불확실성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사전에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시장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 획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최근 우리에게 대두되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위태로운 도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의 성장률 예측이 거의 다 빛나가고 있으며, 그만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확실성 넘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보다는 여러 경제적 문제를 억누른 채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향배, 그리고 예측이 곤란한 달러화 가치 향방이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34만여 가구에 이르는 데, 금리인상으로 10만 가구 정도가 파산 지경에 이르면 정책당국이 대응할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 질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과 변동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대선 당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고, 미국 대선 개표 직후, 트럼프의 주요 공약(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되며 주요 아시아권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 KOSPI 지수는 2016년 11월 9일 전일대비 2.5% 하락, 원화 가치는 1.1% 하락하였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공약 현실화에 대한 시간적 제약 및 실현 가능성 등으로 유럽 및 미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크

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역시 중장기적인 시각임을 감안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 강한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⁴⁴⁾’ 보고서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2012년 유로존 위기가 터지면서 약 200포인트에 달했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4년 57포인트까지 낮아졌으나 국내 산업구조조정 확대 및 지연,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2016년 12월 389포인트(추정치)까지 수직 급등했다.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7포인트,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52포인트를 기록했다가 그 후 지속 하락해 2015년 20포인트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6년 12월에 다시 48포인트로 치솟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활동이 저하된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지연되는 ‘불확실성 함정’에 한국 경제가 빠져들었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정치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불확실성과 양상이 다르다.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를 위시한 ‘스트롱맨 시대’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이끌고 있다. 미국 경제가 부양책으로 일시적 성장을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조한 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미국 경제 회복조차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불확실성과 혼돈이 증폭되는 요인이다.

트럼프가 감세·규제완화를 계속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

44) 조규림·정민·오준범, 2017,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다 -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론이 퍼지고 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월스트리트도 곧 시큰둥해지는 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트럼프 경제정책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면서 경제를 더 나빠지게 만들 것이다.

둘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강화와 함께 재협상이나 탈퇴 가능성까지 공언해 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대해선 재협상과 탈퇴 가능성을 공식화 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든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협정 위반을 응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특히 덤핑·환율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겠지만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제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의 엄밀한 조사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표방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자유무역과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서민층은 정부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됐다고 주장한다. 각종 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 자유무역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천명한 것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

었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의 형태로 최근 급속하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트럼프 정부 하에서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조치는 클린턴 시기(1992-1999)의 1,052건에서 오바마시기(2008-2016) 3,746건으로 3.5배나 증가하였다. 나라별 무역조치의 비중을 보면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이 1992-1999년 중 75.0%, 2000-2007년 중 87.3%, 2008-2016년 중 90.8%로 각각 증가하였고,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중 73.2%, 2000-2007년 중 84.5%, 2008-2016년 중 86.3%로 각각 증가였다. 트럼프는 한미 FTA폐기 또는 재협상, 중국·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공약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배경으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중 7,343억달러로 GDP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3,470억 달러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중 276억 달러로 전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인데(미국비중 13.3%, 중국비중 24.4%)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제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즉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총 24개국과 FTA 협정을 발효시켰는데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NAFTA로 2조 5,000억 달러, 한미 FTA로 1,100억달러 등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은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10만개나 감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의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먼저, 한미FTA 폐기로 인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 추정 결과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 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⁵⁾

대미 수출의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5억 달러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2만 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9만 명의 10.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45) 정민·조규림·오준범,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9쪽~10쪽

- 2000년 1분기에서 2016년 3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GDP, 원/달러 환율, 양국의 상대적 물가수준, FTA 터미 변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트럼프 집권기간(2017~2020년) 동안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해 FTA에 따르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가정
- FTA가 유지될 경우 2017~2020년 대미수출 전망치와 회귀분석에 따른 FTA 효과에 대한 추정 계수를 토대로 FTA 폐기시 예상되는 손실액을 추정
- 산출된 손실액과 산업연관표상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국내 고용에 대한 감소분을 추정

표 5. 2017~2020 대미 수출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결과

구분	대미수출 손실액(억달러)	국내고용감소분(만명)
2017	30.9	3.0
2018	32.0	3.1
2019	33.1	3.2
2020	34.2	3.3
합계	130.1	12.7
연평균	32.5	3.2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1.5% 감소하고 이는 18.7억 달러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⁶⁾. 품목별로는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섬유, 원단, 의류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직간접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누적기준,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주장한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중간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할 경우, 한국의 對미국 직접수출 및 중국을 통한 對미국 간접수출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보호무역 강화를 통한 자국의 수출 개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화

46) 정민·조규람·오준범,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0쪽

-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TIVA, Trade in Value-added)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영향을 추정
-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상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분을 추정

강세보다는 약세를 원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셋째 환율조작국⁴⁷⁾ 지정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논란이 뜨겁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가히 환율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렛대’ 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환율조작 혐의’ 로 압박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원인을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는 나라를 대상으로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환율조작으로 판단되면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환율조작국 카드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47) 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적자 대상국이 중국, 독일,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이슈이다.

이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환율조정을 들고 나왔으며 그 주된 대상은 중국이다. 그래서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것이 환율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과잉수출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국내요인 즉 과잉저축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왜 중국에다 그 화살을 돌리느냐고 반격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 문제가 미국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중국이 환율을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불공정하고 또 부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국가간 갈등을 유발하고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절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수출의 감소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대미 무역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원화가치 저평가를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17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달러 균형 환율을 달러당 974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화가 한국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미국이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균형 환율은 대내적으로 경제

가 잠재성장률에 다다르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환율을 말한다. 피터슨연구소는 “달러화 가치가 10% 내려가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매년 2200억 달러 줄어든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가 한국의 환율조작 근거로 든 것도 피터슨연구소 보고서였다.

넷째, 인프라 투자계획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의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⁴⁸⁾

중기적으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확대로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확대시 자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및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對미국 수출 증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 계획은 미국공공인프라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의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이 계획은 건설, 에너지, 교통 및 항만, 상하수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여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건설업의 투자기회가

48) 홍준표, 2016,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1쪽.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인프라 건설 및 이에 관련된 수요의 증대로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미국 건설 수주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나 인프라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 미국 인프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이들 제품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이미 대규모 미국 인프라 수주에 성공하여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증폭미 비중은 4%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국은 교각 및 지하철역 건설 부문(총 65억 달러)에서, 일본은 고속철도 부문(200억 달러)에서 각각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한편, 철강제품, 에너지, 건설기자재, 운송장비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출은 전체 대미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송유관 설치시 미국산 철강사용)로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철강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 정부가 공공인프라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할 경우 총 수입 유발액은 약 1천억 달러(연평균 200억 달러)로 추정된다.⁴⁹⁾

산업별로는 석유제품(387억 달러), 광산품(86억 달러), 전기전자(68억 달러), 금속제품(66억 달러), 기계 및 장비(49억 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미국과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수입액의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49) 심혜정, 2017, 미국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4쪽

- 세계산업연관표 56개 산업 중 ① 전기, 가스, 냉난방 ② 수도 ③ 건설 ④ 도로운송 ⑤ 항만 ⑥ 항공 ⑦ 운송서비스 등 7개 산업을 통합하여 공공인프라 산업으로 재분류
- 내생부분에 포함된 인프라 부문을 외생화하여³⁾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으며, 5년간 1조 달러가 투자된다고 가정함
- 멕시코,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수입국의 수입유발액을 비교

으며, 멕시코(10.4%), 중국(7.4%), 독일(3.5%), 일본(3.2%) 순으로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4%를 차지하며 주요국 대비 수입액 규모가 비교적 작다.

표 6. 미국 공공인프라 1조 달러 투자시 수입유발액(백만달러, %)

구분	총수입	캐나다	멕시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자기산업	51,625	9,801	5,400	4,880	2,129	2,042	1,574
타산업	50,236	15,074	5,184	2,624	1,391	1,286	914
총효과	101,861	24,875	10,584	7,504	3,520	3,328	2,488
비중	100	24.4	10.4	7.4	3.5	3.3	2.4

미국 공공 인프라 1조 달러 투자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5년간 총 25억 달러(연평균 5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살펴보면, 석유제품(6.1억 달러), 운송장비(3.0억 달러), 금속제품(3.0억 달러), 전기전자 (2.5억 달러) 순으로 수입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경기부양 효과, 미국 건설 수주에 따른 부수효과 등 간접적 수출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 증가액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전체 대미 수출이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공공인프라 수주로 인한 선진기술 습득, 미국 건설시장 내 입지 획득, 기타 관련 산업 시너지 등 간접적으로도 우리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및 미국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2~3%대 성장세가 전망된다. 정부의 에너지산업 부흥 기조 및 도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과 맞물려 에너지(파이프라인), 운송(육상운송)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표 7. 미국 건설 및 인프라 시장 전망 (십억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	시장규모	717	756	793	829	869	907
	실질성장률	5.0	3.7	2.4	2.5	2.7	2.3
인프라	시장규모	175	181	191	201	212	222
	실질성장률	-6.6	1.6	3.0	3.2	3.1	2.8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계수요 확대 및 미국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미국의 수입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성장성과 안전성을 갖춘 반면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지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별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병존한다⁵⁰⁾.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 각 분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 하에서도 빈번하게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어온 철강, 화학, 가전 등은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철강업 계에서는 이미 반덤핑 제소를 당한 적이 있어서 트럼프가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미칠 영향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합성고무는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의 타격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기계산 업도 한미 FTA의 파기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부활한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0) 문중철, 2016,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4쪽~16쪽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첨단기술 산업이다. 스마트폰 등의 품목은 이미 생산 기업 간의 특허소송 등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에 그치고 있고, 반도체 자체로는 대미 무역이 적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보다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변동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이미 미국의 국내 수요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물량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산업의 대표적인 예인 섬유산업의 경우 대미수출 비중이 낮아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파기되어 관세가 부활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클린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시사함에 따라 대규모 초기 투자가 행해져 온 태양광 등 클린에너지 산

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대한 이행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미국이 평가하는 의약 품 등 품목과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미국 내수수요 및 전 세계 무역량 위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통상 및 제조업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정책에는 기회요인도 있다. 여기서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회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트럼프의 대외무역 정책의 주 표적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 TPP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1/10 수준으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TPP에서의 철수와 對중 견제이며 한미 FTA의 재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TPP 철회 혹은 비준 연기로 인한 반사이익 가능성도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TPP의 철회 혹은 비준 연기는 대미무역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위를 의미하며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무역에서 각종 무역조치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추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에너지 관련정책

등도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정비와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인프라 정비 확충에 약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한 인프라 확충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약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규모가 방대해서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역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석유, 석탄, 셰일가스 등의 생산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조달비용의 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도 에너지 조달비용 절감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의 추가 발굴을 위한 굴착장비, 발전장비, 에너지 운송 및 저장 등 관련 산업의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 기회 창출 가능성이 있다.

2.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정책대응의 부재 등이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에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된 이유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등의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⁵¹⁾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경제성장률 저하 및 IT 기술발전에

51) 김원기·윤여준,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5쪽~6쪽

따른 면이 존재하며,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경우 제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의 문제 역시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비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행정명령 발동 등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을 표시해왔으며, 그의 지지층 역시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있어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한 심화된 보호무역주의가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수단⁵²⁾

우선 미국의 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제재 수단을 점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국제무역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부에 상당한 무역 규제 권한을 위임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등 보편적 무역규제 수단 외에도 환율조작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강도 높은 무역 제재 권한을 미국의 자국법을 통해 행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표 8. 미국 행정부의 주요 보호무역 수단

수단	근거법령	집행기관	무역규제방안	비고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1930년 관세법	상무부 국제무역위	관세 부과	
201조 세이프가드	1974년 무역법 제201조	국제무역위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52) 박은지, 2017,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점, 31쪽~32쪽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1930년 관세법 제337조	국제무역위	수입금지, 중지명령	삼성-애플 특허 분쟁 '13년 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 명령
일반 301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	USTR	양자협상, 관세 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유예 등	
스페셜 301조 지재권보호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	USTR		2008년 이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	USTR		만료 상태이나,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부활 권한 가짐
122조 국제수지 위기 대응	1974년 무역법 122조	대통령	최대 15% 관세 인상 등 (최장 150일 간)	
232조 국가안보 수입규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	상무부	관세부과, 수입량제한 등	
환율 조작국 대응	2016년 무역촉진법 제701조	재무부	미국정부조달금지, 금융지원 금지 등	관찰대상국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국경세	근거불확실 (트럼프 언급)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35% 부과, 중국산 수입품 관세 45% 부과	

2016년 12월 기준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은 총 23건으로 5건은 조사 중이며, 18건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가 최대 규제국가이며, 미국은 그 뒤를 이어 2위 규제 국가이다. 주로 철강, 금속, 화학제품에 치중되어 있으며, 2건의 전기전자 규제 건은 세탁기, 유입식 변압기이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가 강화될 경우, 철강·화

학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장벽 대응을 강화한다면 한국산 제품들도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거나, 동일한 한국산 제품까지 함께 제소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NAFTA 재협상 등 미국과 멕시코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에도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이 악영향을 받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⁵³⁾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필두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을 유발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경제에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교역 대상국의 보호장벽 강화와 시장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세계교역 감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거래비용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 경우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보호주의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형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중간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對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한국 제품에 대한 동반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다. 특히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영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53) 최환석, 배정미, 2017,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7쪽~9쪽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경영난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먼저, 실물시장에서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가능성 존재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22.9%)에 이어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11.3%)의 보호무역 강화로 기계, 전기,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는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력(slack)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교역 감소는 주요국의 수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對중 수출 중 약 80% 이상이 산업원자재 및 부분품, 자본재 등이 차지하고 있고 소비재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미·중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對중 수출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2016)은 중국의 對美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총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對중 수출 품목기준 중간재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한편, 국내 대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체의 어려움 역시 가중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역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될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對미 무역흑자를 근거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한국이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트럼프 리스크와 연계되면서 원달러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또한 향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및 주요국들의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원화와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74%가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실제로 대표적인 환헷지 상품 중 하나인 환변동보험의 중소기업 가입 실적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추이(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가입실적	27,043	18,292	11,468	17,202	15,096	12,262
대기업	1,829	1,153	337	228	-	-
중소기업	25,214	17,140	11,131	15,081	-	-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주: 2014년도부터는 대·중소기업 가입 실적이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자금조달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담보제공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중소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2016년 11월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결과를 포함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70.7%가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복수응답)은 자동차(92.5%), 전기·전자(54.2%), 철강(46.2%)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에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복수응답)으로는 '보호무역조치(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강화로 인한 애로 증가'가 41.7%로 제일 높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53%)이 '환율 변동성 확대 완화를 위한 적극 대응'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내실경영'과 '새로운 거래처 다변화 모색' 등이 거론됐다.

美 경제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담 및 현장조사 결과

- 한국경제전문가 면담 및 중소기업 현장조사(12.16~12.31) -

□ 중소기업연구원 등 경제단체 전문가 의견

- (KDI)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체계를 심층 점검해 통상 마찰 소지를 줄일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세계개혁안이 시행되면 미국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시장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
 - 수출 기업은 미국 현지에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
 - 대미 통상압박,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
- (산업연구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과 공세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자동차, 기계, ICT 등 수출 손실 타격이 큰 산업별 추가협상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첨단 ICT 산업과 가전산업 등에서 한미 무역 패러다임을 양국간 가치사슬참여확대 및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킬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등 한국과 미국의 신산업 개발 및 정책이 보완적일 수 있도록 협상방안 마련 필요
- (무역협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축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통상 마찰이 점증
 - 무역협회 등 민간 차원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경일대교수) 최근 최우선 과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미국 통상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KOTRA)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
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
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
 - 정부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
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의 보
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개방형 구조를 가진 한
국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별 대책이 필요
 - 자원이 부족하고 품질·브랜드·유통망 등 비가격 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 정부는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
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
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
- (경기연구원)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하여 비상품분야 산
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
 -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
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할 필요
- (기타전문가) 정부가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협정일 수 있으므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 지식재산권 문제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보이
지 않는 관세 장벽,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완화 등은
재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 중소기업 현장조사 결과

< 조선일보, 수출업체 300개사 조사결과 >

- 수출 기업의 16%가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 고 답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곧 체감할 것” 이라는 응답도 38%
- 수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보호무역 조치는 통관절차 강화·지연(54%)
 - 급격한 관세 인상(20%), 반덤핑 관세(12%), 세이프가드(8%), 위생검역 강화(8%), 기술장벽 강화(8%) 등도 걱정
- (○○기업) 정부가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
 - 중소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별/품목별 종합대책이 필요
- (○○기업)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재협상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금속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해당 산업계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지 불안
 - 대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 될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도래
- (○○기업) 미국에서 제품 경쟁력이 월등해 덤핑관세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거래선이 상당수
 - 경쟁력이 뛰어나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충격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
 - 품질에 국한하지 않고 제품 디자인, 패키지 등은 물론 한류와 같은 감성과 문화 코드를 덧입혀 문화 경쟁력을 높일 계획
- (○○기업) 미국이 실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 태양광 업계가 수출을 다변화하겠지만 주요 수입국인 중국도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이어서 수출이 쉽지 않을 것

V.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1. 우리경제 전반의 대응방향

자국우선주의, 反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도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⁵⁴⁾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제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품질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한미FTA가 폐기되거나 재협상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해 양국간 이익의 불균형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전자, 기계 등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통상을 연계해 총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트럼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54) 정민·조규림·오준범,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1쪽~12쪽

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이 실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 등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등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 민간 부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차세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 협력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측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미국 정부와의 관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⁵⁵⁾

55) 최강, 2016, 트럼프 정부와 한미 관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14쪽~15쪽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 차기 트럼프 정부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를 강하게 연계시켜 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각 양자 관계에 독립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가 본인의 공약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교역 품목별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근거해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가 한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미중 간 통상 문제와 미국 국내 일자리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안보 문제로 전이되고 또 확산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미중 간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과 중국에 대한 평가를 미국과 공유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실무진 차원은 물론 정부 고위급 인사 사이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를 토대로 향후 계획과 정책을 세울 때는 현행 지역 안보 구도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중국역할론 보다는 중국책임론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횡수가 많지는 않지만,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몇 차례 발언한 적이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완벽한 통제력(absolute control)”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이 미국 대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데는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 탓도 있지만 중국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탓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적극적 대미(對美) 공공 외교와 함께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미 공공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한미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치밀한 공공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미 의회에 대한 더 능동적인 공공 외교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미국이 궁금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달할 이야기와 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자 간의 외교적 대화에 노력을 쏟으면서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다른 역내 국가들과 연대한 대미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및 정책에 대해 한국과 어느 정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끼리 상호 협력하면서 대미 외교를 펼치는 것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이 때는 개별국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두가 동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안정과 공통 이익 수호를 위해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또한 대미 외교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각 참여국이 어느 정도는 외교적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 대응에 대한 참여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신뢰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공정한 무역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대미 통상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시급하다. 물론 미국의 자국 우선 또는 불합리한 조치에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망라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이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물론 한국이 요구할 사항을 찾아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 뒤야 한다.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중요하다. 국제 공조는 다자체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주요국과의 복수 간 무역협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수준 높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성공적 타결은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에도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한국도 TPP에 원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어떤 형태로 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메커니즘에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와 우려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경쟁력 증대로 이어진 사례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척박한 통상환경은 이미 예고돼 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는 반세계화이다.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의 확산이 세계교역을 위축시키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대 고성장기에 확대되어온 소득격차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에 대한 불만이 중국 등 고성장 개도국에 표출되면서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온 세계화가 멈춰버린 상황이다.⁵⁶⁾

G20 정치 지도자,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주요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 과잉업종의 경우 단기 내 공급량 조정이 쉽지 않아 보호무역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신흥국들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학계 일각에서도 최근의 특수한 경제상황에서는 보호무역이 국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⁵⁷⁾*하고 있다.⁵⁸⁾

트럼프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 또는 무효화하고 중국 및 멕시코에 35~45%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및 고율의 관세 부과가 공언대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만 자유무역기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은 테러확산과 브렉시트 결정으로 EU체제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이 2016년에 크게 상승한 바 있다. 2017

56) 이근태, 2017, *확박한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당분간 계속 어려운 무역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LG경제연구원 칼럼, 3쪽.

57) Barry Eichengreen교수는 거시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국내수요를 자국 생산물로 전환시켜 생산과 물가를 높이고 실질부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The Guardian, 2016.7.15.일).

58) 조인우, 2016,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의 흐름과 시사점*, 한국은행 글로벌 시리즈(1), 14쪽.

년 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극우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며 영국에 이어 추가적인 EU 탈퇴가 공론화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에 반해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확산되면서 무역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이렇듯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무역제재에 신흥국도 맞대응하면서 보호주의 흐름은 전 세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신흥국들은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은 OLED, 배터리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에서 검역 및 규격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2017년 사드보복에서 보듯이 정치적 갈등이 무역제재와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을 종합해보면 세계경제가 당분간 근본적인 회복기조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무역제재와 보복이 늘어나는 등 국가간 분업 흐름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약화추세가 지속되는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을 둘러싼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은 나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당분간 한국 수출환경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어려운 세계무역환경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 장기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정부·기업·전문가 등의 전방위적인 공동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보호무역조치가 각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중요하며 기업들도 개별 기업입장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협업하여 정보공유, 정부와의 소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⁶⁰⁾

보호무역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응을 주도하면

59) 이근태, 2017, '확박한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당분간 계속 어려운 무역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LG경제연구원 칼럼, 4쪽.

60) 조인우, 2016,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의 흐름과 시사점', 한국은행 글로벌 시리즈(1), 15쪽~16쪽.

서 FTA 협정의 확대·강화, 교역분쟁해결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TPP 참여를 적극 추진하면서 한·중, 한·인도 등과의 FTA 수준을 제고하고 한중일, 이스라엘 등과의 FTA 협상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양자 협상, WTO 분쟁해결기구 등을 통해 일방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강화⁶¹⁾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사관, KOTRA, 수출 기업 등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품목의 여타 수출국가의 정부 및 기업들과의 공동 대응도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 조치 대상 품목들은 글로벌 기준 및 규격에 맞는 노력을 강화하여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 명분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산품, 가공식품 등 수출품목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제고⁶²⁾* 하여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술표준이 무역 상대국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최신 정보가 적시에 파악될 수 있도록 현지 업계와의 교류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의 다변화, 주력 수출품의 기술혁신 등을 통해 보호 무역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아 주력 품목이 보호무역 조치를 당할 경우 수출 및 산업 전반의 충격이 우려된다.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61) 우리 정부는 지난 9.7일 미국이 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9~13%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여 미국 조치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

62)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농산품, 가공식품 등의 글로벌 기준인 국제식품규격(Codex: Food code)에 채택된 품목은 김치, 인삼, 고추장 및 된장 등 4개 품목.

2.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⁶³⁾

먼저, 단기적으로는 정부나 유관기관, 통상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대에 개별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며, 정보의 공유나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 노력을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기구, 무역 관련 전문가, 지역별 통상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국제환경 및 교역여건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해당 변화가 자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제도 활용 및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산업부 무역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⁶⁴⁾를 마련해야 한다.

63) 최환석, 배정미, 2017,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10쪽~11쪽

64) 14년 12월 터키에서 한국 휴대폰에 대해 셰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자 관련업계, 정부, 전경련은 터키 경제부장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서한 전달, 조사 대상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4개국 협회 의견서 전달, B20 회의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조사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표 10. 주요 무역구제 관련 상담 서비스

구분	내용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생산·판매 지표 등을 입력해 무역구제 신청 요건 및 자격을 진단하고 무역구제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스템 - 기업이 스스로 단계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기업의 상담 요청 시 담당 조사관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역구제에 대해 상담 -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등
무역구제 지원센터 (전국 3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관련 정보 공유 및 상담 - 경제단체(21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역본부 등 업종단체(11개): 각 업종별 협회 - 유관기관(1개): 대한변리사회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업종별 협회 -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제품 등의 수출입피해 상담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장기적으로는 환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외부환경 급변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환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충하고, 환헷지 상품 가입 등을 통해 환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통화옵션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고정 환율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물환이나 환변동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무엇보다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약 6억 3천만 명의 인구, 2조 5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ASEAN은 최근 G2 리스크로 대체시장 발굴이 절실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이다.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무역거래가 1건 이상 있었던 국가가 248개국이며, 이 중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는 국가는 110개국에 이른다. 작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4,954억 달러였는데 그 중 對중국 수출액은 1,244억 달러로 전체의 25.1%에 달한다.⁶⁵⁾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이라 볼 수 있는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限韓令)⁶⁶⁾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해 중국 관광객 또한 급감하면서 국내 일부 관광지의 지역경제가 휘청 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무역보복이 초기 우려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수치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특정 국가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65) 김한수, 수출 중소기업 기본에 충실할 때다, 『에너지경제』 사설 『아침햇살』, 2017. 6. 28.

66) 중국 내 한류 금지령 :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한령(禁韓令)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한중 합작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한국 배우가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거나 CF로 모델로 발탁된 한국 연예인이 예고 없이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되는 것, 한국 드라마 대부분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류금지령의 여파로 2016년 11월 주식 시장에서는 한류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중국인 소비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관련주도 타격을 받았다. (시사상식사전)

는 것이 하나의 국가 리스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출 다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은 진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해당요건을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둘째, 문화적·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중소기업이 실감하는 외국비용⁶⁷⁾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 시장 진출의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다른 선진국을 공략하면서 시장 다변화와 고도화를 이루는 발전적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을 거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하지만, 또다시 올지도 모르는 피해를 대비해 근본을 단단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기본으로 돌아가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해외시장 환경, 해외소비자의 니즈 등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요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기에 현지시장의 트렌드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 되면서 시스템이나 물품 등을 세계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와 인증에 대한 지식이다. 수출 국가에 따라 특허와 인증 시스템이 다르다. 특히, 특허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어렵게 진출한 후에 현지 기업의 ‘미투(me too) 제품’에 의해 점유율을 쉽게 빼앗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미미한 곳이 있어 특허신청은 필수이다. 이를

67) 외국비용 (Liability of Foreignness) : 현지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이 실감하는 불리함의 총칭.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성향인 ‘글로벌 지향성’을 지녀야할 것이다.

이미 수출현장에서는 수출시장 다각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벌써부터 뛰고 있는 발 빠른 중소기업들도 있다. 물론 이렇게 발 빠른 기업들도 있지만, 수출의지가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금 운용의 한계로 현지 시장 분석 등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중국과 미국에 집중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 아세안은 2011년 이후 미국, EU 등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아세안 수출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때에는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활로를 넓힐 뿐만 아니라 관세 혜택에 따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⁶⁸⁾

아세안 각 회원국은 인프라 구축, 투자법 개정 등 역내 경제통합의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는 회원국끼리 혹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주재 기업들은 AEC⁶⁹⁾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할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들도 역내 경제통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EC는 EU보다 경제통합 수준에서 매우 낮은 단계이고

68) 정혜주, 2015,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74쪽~76쪽.

69)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10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이며,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물류와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1997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정상들에 의해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15년 11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발족에 서명해 2015년 12월 31일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위키백과)

연내 AEC 출범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높으나, 아세안 지역경제가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 자체로 글로벌 경제와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아세안 역내 경제 통합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기대감도 높다. AEC 출범에 대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산업 현대화 작업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기회요소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회원국은 AEC 출범에 대비하여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있다. 태국 및 CLMV⁷⁰⁾ 국가들은 중국부터 인도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및 철도 연결 등을 통해 물류허브로서 자국의 이점을 적극 피력, 외국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의 낙후된 물류체계 재정비 노력은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이 이를 3자 물류 진출을 위한 중간 물류기지로서 우리기업의 활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현지생산, 현지공급’ 원칙에 따라,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도요타의 IMV 모델은 인도네시아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필리핀에서 변속기 및 플라스틱 공정을, 완성차를 인도네시아로 판매하여 성공적인 공급망 구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에 상대적으로 앞선 일본 기업들을 벤치마크 해, 아세안 역내에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TPP 등 양자 및 다자간 FTA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왔다. 우리기업들이 촘촘히 연계되어 있는 FTA 구축망을 잘 활용하면, 보다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다.

70)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아세안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급증하고 있는 소비시장을 주목, 생산거점으로서 뿐 아니라, 거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 선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는 중산층 증가로 유통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롯데리아, BBQ 등 프랜차이즈 시장은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넘어,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 중에 있다. 베트남에서는 백색가전, 화장품 등 한류 관련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한류와 유통 소비 트렌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소비시장이 커지면, 여성타깃 제품, 소셜 미디어, 헬스케어, 친환경 상품 등의 수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이 인도시장이다. 인도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일련의 경제정책 목표는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심화 및 확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⁷¹⁾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Make in India(2014.9), 통상정책 2015~2020(2015.4) 및 2015/16 예산안(2015.2) 등의 목표는 제조업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제조허브로 도약, 8%대 고성장궤도 재진입할 계획인 것이다.

향후 인도 경제의 성장동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형태의 제조업 발전, 즉 원자재 생산/수입 후 가공하여 중간재로 수출 또는 중간재 생산/수입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인도가 주는 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에 적기이다.

제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도정부의 전방위적 이니셔티브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

71) 최윤정, 2015,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인도 제조업 진출전략, 코트라 Global Strategy Report. 00쪽~00쪽.

다. 모디 총리는 “인도에 와서 만들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환영”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적도 있다.

인도의 정책방향은 대인도 단순수출을 억제하고 현지 제조 투자진출을 우대하는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과 25개 중점산업을 지정하는 한편, 이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 인센티브 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향후 10년 내 한국의 수출대상국 5위 안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중요 시장이다.

인도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진출하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다. 기업을 설립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사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과는 달리 단독 법인을 만들 수 있으며, 법인세와 저렴한 공장부지 가격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도에는 300여 개 가량이 진출해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도에는 특히 인프라 관련 시설을 수주하는 중공업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사우디와 이집트는 향후 15년간의 국가발전계획을 산업다각화를 통한 탈석유 경제의 구현 이외에도 사회발전, 환경보존 등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국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오는 시장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접근이 강화되고 있는바, 석유화학 수입, 건설플랜트 수주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⁷²⁾

사우디는 2016년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중심으로서 사우디, 글로벌 투자의 원천, 글로벌 허브로 사우디의 미래 비전을 담은 사우디 비전 2030 발표하고 이집트는 2015년 근대화, 개방화, 민주화, 생산성 강화와 행복한 시민사회 구축을 통한 세계 30위권 국가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SDS) 2030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은 지속가능발

72) 김지현, 2017,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코트라 Global Strategy Report, 3쪽·40~44쪽.

전 전략으로서 비전 2030, NTP 2020, SDS 2030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진출과 디지털화, 도시개발, 관광분야 등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재정보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PPP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EPC 위주의 진출에서 탈피하여 사우디와 이집트의 PPP 경향 가속화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⁷³⁾은 설계, 투자, 시공, 공사완료 후 운영과 관리까지 종합 적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이상 장기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단기적 성과 위주의 도급사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주도 조성 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국영기업 민영화계획의 일부로 공항, 병원 등에 대한 민영화 기회를 확보하고 이집트의 교육·사회섹터 PPP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섹터⁷⁴⁾에 대해 민영화 가속화 계획에 주목하여 진출 확대 기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병원 및 공공약국 민영화에 따라 국내 헬스 케어 부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적극적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진출, 관광산업 유발 수요, 전자정부/디지털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중장기 시장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 친환경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동반 진출 기회 강화 및 투자-기술-개발 연계형 진출 기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도시개발은 관련 제도정비, 계획수립, 인프라 시설과 건축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프로젝트로 기존 해외 인프라 수주 등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연계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 기여도 높을 것으로 보

73) 시공자(또는 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물 시공, 운영 또는 주택/산업단지의 분양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관협력(PPP), BOT, BTO, BOO, IPP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칭한다.

74) 통신, 담수화 (공급시설, 하수처리), 항공·공항, 체신, 헬스케어, 교육, 사회서비스, 스포츠클럽, 철도 및 도로교통, 항만, 산업도시, 곡물유통, 지역서비스 등

인다. 스마트시티는 높은 수준의 ICT 기술과 에너지-건설 등 산업 간의 연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다.

중동 지역의 호텔·리조트 산업은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체인이 시장의 중심으로 관광산업 자체 보다는 관광산업으로 유발되는 상품 수출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식음료,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 관련 수요 증대하면서 수입 확대 예상되어 관련업종은 적극적 시장진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확충으로 에너지와 물 소비 급증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물/에너지 관리효율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비전 2030과 SDS 2030 모두 정부 전체 업무영역의 디지털화, 전자정부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 동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2016년 UN 전자정부 3위 선도국인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수출, 스마트시티 관리등 수출모델 다각화를 통해 진출기업 확대가 필요하며 디지털 병원은 헬스케어 분야 클라우드-모바일-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병원화를 선도하여 향후 기회 확장이 필요하다.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 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섬유,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선박, 가전 등 모두 13개다. 이들 13개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육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전 세계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 신흥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기에 선진국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집중해 기존 산업의 비중을 줄이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소위 ‘국가 산업의 패러

다임’ 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나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5대 품목의 주력 산업 편입 기간이 평균 36년이다. 즉, 지난 36년 동안 이 산업들이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뜻이다.

이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제품을 발굴하고, 화장품, 게임 등 한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모델을 특화시켜야 한다.

제품에 입혀진 서비스는 유지·보수·관리 등 토털 솔루션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락인 효과(Lock-in effect) 로 수요자는 기존 제품·서비스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진다.⁷⁵⁾

제조업의 기능이 ‘생산 자체’ 에서 ‘디자인, R&D, 비즈니스모델, 조직역량’ 등 글로벌 가치 사슬상 고부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지관리, 컨설팅 등 제품소비 전 과정의 가치 사슬화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솔루션화, 네트워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는 생산공정에 ICT를 활용하거나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제품에 기반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75) 문병기, 2016,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1쪽~19쪽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ICT와의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로 생산성, 속도와 유연성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 ICT 공정혁신을 접목하여 설비 운영 효율화, 비용절감, 다품종 유연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⁷⁶⁾

스마트공장을 위한 센서, 소프트웨어, 공정제어 등 핵심기술 경쟁력이 선진국의 70%로 핵심기술 자립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며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헬스케어 등 수익성 높은 스마트 지식기반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한다.

최근 5년간 측정 및 분석기구, 약제제품 및 의약품, 항공기 장비 등 하이테크 제품수출이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비중이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보면 수출품목 다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과거 제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주된 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점차 서비스기능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애프터서비스)을 통해 많은 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다. 제조 기업들이 제품 제공보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업 가치사슬에 서비스의 역할이 새로 편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조업에 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⁷⁷⁾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는 “Product” 에서 “Project” 수출 시장으

76)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사례 : GE 엔진유지관리서비스, 제록스 문서솔루션서비스, 테슬라 전 기 자동차와 충전소, 네스트 상품 플랫폼 온도조절기 중심 스마트홈 구현

77)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소비생태계를 구축함. 애플이 스마트폰(제품)과 앱스토어(서비스)가 결합하여 고객에게 고부가가치를 제공 하여 2015년 기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였다.

로 시선을 돌릴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對美 상품교역 수지 흑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는 '15년 기준 107억 달러(수입 : 217억 / 수출 : 110억 달러 , 美상무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정부는 낙후된 국내 공공 인프라 건설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해외업체 참여 유치에 적극적이다. 현지기업과 협력, 공종다변화, 전후방 사업 통합,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공공 인프라 시장을 對美 서비스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객다변화도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하드웨어 기능 중심의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시장 내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디자인, 모바일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등 소프트웨어 기반한 차별화 전략이 고객유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제조업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및 빅 데이터의 활용을 바탕으로 생산방식,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방식 등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비즈니스 모델 전주기 상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혁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대표되어 온 제조업의 혁신활동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의 제조업은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결합하며, 맞춤형 소량생산, 스마트 공장 등 제조공정 측면의 혁신과 소비자 접점이 제품에서 IoT 제품기반의 서비스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⁷⁹⁾

78) 이정민·권오승, 2016,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27쪽.

제4차 산업혁명은 IoT를 비롯한 ICT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밸류 체인이 ‘연결’ 됨으로써 큰 장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업은 확실히 IoT에 적극적이고 이미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밸류 체인 속에 있는 중소기업이 ‘연결’에 대응할 수 없으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대형제조업 등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⁸⁰⁾

한편 중소기업은 ‘연결’ 되는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기존에 매달려 온 제한된 비즈니스 범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기술력이나 상품력 등에 강점이 있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거래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기업 내의 이해 조정이나 거래처 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으므로 오히려 중소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회와 리스크 측면에서 생각하면 중소기업에게는 기회 비율이 높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에서 설립된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Industry 4.0⁸¹⁾ 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앞서 실현한 기술도 다수 존재한다. 데이터 연계에 의해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점’ 와 ‘그 이외’를 구분하여 ‘강점’ 이외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연결되어 나가는 것으로서 비약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79) 이은민, 2016,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쪽

80) 블로그,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가?, 모바일경제연구소

81)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 전략이다. 인터스트리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제조업의 생산방식을 스마트, 그린 및 도심형 생산으로 변화시키고, 인력교육과 전문성 개발도 기업별 개별 교육에서 공동 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생산방식 및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이 스스로가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3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경험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실제 세상과 연결된 “글로벌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산업의 중심을 제품 판매→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일단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기 마련이다.⁸²⁾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구현으로 플랫폼에서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들이 활용하는 자동차, 기계설비, 부동산 등의 자본재까지 결합하여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활용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제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 플랫폼 업체의 지배력 하에 있는 것 같이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플랫폼 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속화될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⁸³⁾을 활용해야

세계화의 추세가 심화되면 될수록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적·물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현지화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싼값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최종 상품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⁸⁴⁾

82) 온라인 도서 판매점인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대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나, 통신업에 속하는 카카오가 운송업의 영역인 카카오 택시 등 O2O 서비스를 제공

83)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 기업이나 근로자가 상품의 개념화에서부터 최종사용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까지 이동 시키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으로, 생산과정을 국제간 분절화시키고 경쟁을 상품이나 산업 수준이 아닌, 생산 활동 수준에서 심화시키는 것.

84) 이옥동, 2013, 수출 현황 및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디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이나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한 추세에 동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활동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으로 총수출에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여도를 전체적으로 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 제조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혼합된 패키지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과거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서 주된 가치를 창출하였지만, 점차 서비스 기능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융합을 통해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 융합은 제조업 가치사슬에 서비스의 역할이 새로 편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조업에 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 단축에 대응해서는 고도 기술제품 생산과 R&D, 디자인, 유통 등 가치사슬의 상위 부분에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⁸⁵⁾

최근까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되는 추세였으나 디지털 기술발전, 비가격요인의 중요성 확대로 가치사슬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은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진전되거나, 각 거점 도시나 경제권역에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 거점형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R&D, 디자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호, 73쪽.

85) 문병기, 2016,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쪽~21쪽

등 전방(upstream)분야의 핵심역량인 차별화된 기술력과 창의성과 함께 마케팅, 브랜드 등 후방(downstream) 분야의 핵심역량인 맞춤형 현지화, 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 실행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R&D 확대를 통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로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외 생산기지의 원부자재 글로벌 소싱과 현지 조달 확대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단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그치지 않고 ‘Korean Made’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지 원산지 개념 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 문화적 감성, 전통과 한국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을 의미한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제품, 한류제품에 Korean Made 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떠오르는 소비층인 신흥국 중산층에 대해 FTA, 한류문화 마케팅,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활용한 유망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對신흥국 소비재 수출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점⁸⁶⁾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비재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가미된 스토리텔링, 브랜드 개발, 차별화된 SNS 마케팅 활용 등이 중요하다.

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해야

보호무역주의로 무역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만큼 앞으로는 현지화가 답이다. 현지화는 세계화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보다 협력에 기반을 둔 전문기업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특화된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86) 지역별 소비재 수출비중('15년, %) : (선진국)18.2 (신흥국)8.8 (中)4.4 (베트남)6.1

보호무역으로 시장이 줄어들니 차라리 특화시켜 마진율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지역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종합백화점식 대기업 종합상사는 힘들어지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업이 전 세계 현지기업의 바이어와 협력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란 얘기도 된다.

이젠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사정까지 알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외국 다른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각 지역을 공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면서도 특화된 전략을 세워 지역 중소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새롭게 대두되는 신보호주의 시대에는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만으로는 현지화에 성공하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주요 특징이 미국산 제품구입과 미국인 고용이므로, 對미 투자시에는 이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현지화는 투자진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경영, 생산, 판매, 홍보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현지현황을 반영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기존 현지화 전략은 제조업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 차원에서 신흥국 위주의 해외진출이었으나 점차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구개발, 판매, 광고 등에서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해야 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미수출 및 인접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류를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로 창의성, 역동성, 기술성을 갖추고 혁신

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은 생산, 고용 등에서 중심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의 원천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국 新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주요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증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참여가 요구된다.⁸⁷⁾

디지털 경제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계 경제, 교역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지금 종전 대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보장 하지 않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며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 민첩성,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확산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⁸⁸⁾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내의 역할을 보전대, 세계적인 추세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에 있어서 대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정책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성공 기업의 성장 궤적에는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87) 장상식·김예민, 2013,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2쪽~33쪽.

88) 조빛나, 2017, 월드클래스 중소·중견기업에서 찾는 수출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8쪽.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최초 기술로 시장에서 First Mover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R&D 지원과 함께 개발된 기술이 보호받고 대기업과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IT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면서 주요 부품을 공급하면서 분업생산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유발한 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사내벤처, 출신 인력 또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아 대기업의 순기능(Spin off)이 시장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성공기업의 주요 전략 및 기업특성

분류	주요전략	기업의 특성
①Born-global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	·창업 후 1.42년 만에 수출 시작 ·첫수출 후 4.2년, 창업 후 5.6년 만에 수출 100만 달러 달성
②First Mover 전략	·과감한 R&D 투자로 기술 개발 ·기술집약적 블루오션 개척	·세계 최초 기술 개발로 기존 제품 대체 또는 신시장 창출 ·고위기술 수출이 55%를 차지 ·R&D 투자비중이 6.8%
③先선진국, 後개도국 시장진출	·선진국에서 쌓은 높은 경쟁력, 브랜드를 기반으로 신흥시장 진출	·선진국 수출비중이 77.9% ·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9.9% ·수출규모 7,397만 달러
④Micro-Multinational	·수출시장의 다변화	·평균 69개국으로 수출 ·낮은 중국 의존도(18.8%) ·매출 중 수출 비중이 40.5%

⑤대기업과의 동반 성장	·대기업에서 분사 ·대기업과 공동연구	·대기업의 기술인력, 해외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 및 개발 후 안정적납품, 거래처확보에 용이
⑥실험실에 머물던 기술의 상용화	·교수가 창업 ·대학 실험실 내 개발 기술을 상용화	·높은 R&D 비중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확보 가능 ·대학-기업 간 성공 열매 공유 ·대학 내 창업기반 조성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기업 및 제품이 성장, 확장기를 지나 안정, 쇠퇴/구조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확산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도 직수출의 단순한 전략 보다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M&A 등 다양한 방식의 글로벌화 전략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견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글로벌 기업, 대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소·중견 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시장질서의 정착과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⁸⁹⁾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이 고용, 생산성, 임금 등에서 내수기업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 활력 및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수출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R&D 우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해외생산 확대 등의 여파로 내수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만큼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활동 장려를 통해 해외 직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⁹⁰⁾

89) 조빛나, 2017, 월드클래스 중소·중견기업에서 찾는 수출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쪽.

내수와 수출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지향하기 보다는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수출에 의해 발생된 부가가치가 소비·투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간 제조업의 기계화·자동화(노동을 자본으로 대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대로 기획·설계·마케팅 등 고숙련 노동, 첨단기술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⁹¹⁾을 육성하여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출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의 고용유발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재·서비스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군, 업종 등을 타겟팅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지원체계 확충 및 유망 소비재 등 취업유발효과⁹²⁾가 큰 농식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품목별 특화 마케팅 집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융합전략(제조+서비스) 추진을 통해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⁹³⁾되는 유망 신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⁹⁴⁾

90) 문병기, 2017,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9쪽~21쪽.

91) 사례 : 가방산업을 기계식 대량생산에서 고급 수가공업으로 전환

92) 취업유발계수(수출 100만 달러당, '14년, 한국은행 자료로 국제무역연구원 계산) : (통관기준 상품 수출) 7.17명, (서비스 수출) 18.8명
· 제조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 (소비재업) 12.8, (기초소재업) 6.5, (조립가공업) 7.4

93) 2025년 12대 신산업에 58.5만명(제조업전체 인력 중 11.5%) 인력수요 예상('17, KIAT)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수출시장 집중도(HHI)⁹⁵⁾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지역 집중도는 0.0995로 일본, 싱가포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출시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대상국 1위인 중국의 의존도 분산 및 대체시장 발굴 시급하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04년 21.8%에서 2015년 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 증가로 인한 리스크가 고조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동남아·인도를 다변화 목표시장으로 공략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역내 시장 통합도가 높은 유럽은 역내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등의 고성장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역내 시장 통합도가 높은 만큼 유럽 국가들은 수출시장 집중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시장 다변화 전략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ASEAN·인도 등 아시아 역내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ASEAN·인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이나 중산층 소비시장 공략 등을 통해 시장 선점 전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시장 공동개척을 위한 台·日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무역·투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점 시장으로서 동남아·서남아 시장을 타기팅 하고 있어, 경쟁국 동향을 주시하며 진출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94) 이세경·박지현·민유지·박소영·박은경·임성아, 2017,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43쪽~44쪽.

95)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Index) : 산업 집중도를 측정방법 중 하나이나, 동 보고서에서는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대상 국가별 비중을 이용해 수출지역의 집중도를 측정 하는 지수로 활용, 0에 가까울수록 수출지역이 다변화되어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dot \sum_{i=1}^n \left(\frac{x_i}{X}\right)^2, x_i \text{는 } i \text{국으로의 수출액, } X \text{는 전체수출액}$$

무엇보다도, 수출마케팅을 넘어 종합적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주요국들은 단순 수출마케팅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장 개척, 경제협력 강화, 투자진출 지원 등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을 통한 일본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신남향정책⁹⁶⁾은 무역, 투자진출, 자원, 관광, 문화, 인재 등 전방위적인 상호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품 중심의 단품 수출에서 탈피해 수출과 연계한 투자진출과 함께 글로벌 창업 같은 현지화 중심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성숙도가 낮은 전략시장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산업·경제발전에 참여해 장기적 성과를 창출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기관·민간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다변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대만⁹⁷⁾ 등은 시장 다변화 전략의 수행주체로 수출투자진흥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산업진흥기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위레벨의 정부 부처에 조정기구 또는 협의회에서 강력한 정책수행 의지를 가지고,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을 주도해 부처·기관 간 원활한 협력과 업무조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96)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정책. 무역상대국과 경제파트너십을 한 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류대상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통해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 자유무역협정(FTA)등의 관련 협정까지 이뤄내 장기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학생, 학자, 산업 인력의 실질적 상호 교류를 촉진해 의료, 기술,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전방위적인 상호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경제공동체 관계 수립, 인적자원 활용,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97) (일본)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 클재팬 민관협의체, (대만) 신남향정책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⁹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ICT 기술이 제조공정에 적용되며 3D프린팅 등 첨단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수출입 동향과 국제 경쟁력 진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R&D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특화 단계별 R&D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 신재생, 항공·우주, 신소재, 헬스케어 등 수익성 높은 지식기반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2015년 4.23%)은 세계 1위 수준이나 절대규모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R&D 투자에 있어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기술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특화 유지 또는 수출특화로 변경된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ESS), 첨단 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산업 등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R&D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입특화 유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으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농수산물, 항공·우주, 바

98) 문병기·이도형,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의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9쪽~20쪽

이오 헬스 등은 우리의 수출증가 요인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육성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수입특화의 정도를 더욱 더 완화시켜 수출 특화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며 아세안(베트남), 인도 등 수출특화 상대인 신흥국에 대해서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對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33.3%)를 낮추고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 수출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집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3.0%에서 2016년에는 48.4%로 확대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술력 중심의 작고 민첩한 기업일수록 신산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은 4차 산업혁명 부상으로 환경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신성장산업의 전체 수출의 48.4%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1%로 대기업(2.5%)보다 5.6%p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R&D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강화의 원천인 인재가 중소·중견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발전을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춘 등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일시적인 자금지원(융자)’에서 ‘지분투자’ 행태로 전환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벤처투자자(VC)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아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등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해당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강화

중소·중견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세계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한 혁신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달려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가격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30%만이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R&D 집약도도 1.28% 수준이다. 중견기업 역시 1.4%에 불과하다. 기술 선진국인 독일의 6%에 비교하면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R&D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의 성과, 타 정책수단과의 연계성, 산·학·연·관의 생태계, 민간 주도, 효율성 강화 등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기본 원칙하에 기술혁신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적확대 중심의 ‘씨뿌리기식 지원’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집중육성’ 중심으로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 유망기업, 신성장동력 창출기업 등 성과창출 유망기업 군에 투자를 집중하고, R&D와 자금, 마케팅 등 상용화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R&D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출연 연구원, 기술전문기업 등 산업생태계와의 R&D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민간주도로 R&D 기획, 운영, 평가의 전주기를 전면 혁신하여 R&D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에 더하여 기업 자신의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R&D 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양자의 노력이 합쳐져야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간 협력강화⁹⁹⁾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보 수집 및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FTA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국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보호무역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수출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정보 수집 및 공유 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자금이나 법률 등의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지나친 환율 싹틔움현상을 방지하고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체계적 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변동성 유지를 통한 거래량 확대 및 국내 장단기 금융시장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충격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화 채널 활성화, 합리적 분쟁 해결 등의 자유주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FTA 협정은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기존 F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미 FTA의 경우 향후 추가적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협정이 한미 양국에 모두 이

99) 최환석, 배정미, 2017,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12쪽.

익이라는 점을 USTR¹⁰⁰⁾ 및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통상 관련 부처 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국 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통상 관련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통상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일방적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차원의 경고 메시지와 주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외 환율조작국 선정과 관련하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및 경상수지/GDP와 같은 지정요건은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개입에 있어서 지정 요건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흥시장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¹⁰¹⁾

신흥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지로서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만은 최근 신흥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산층이 지향하는 높은 품질이나 적절한 가격수준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이 대만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출대상지로서 신흥국을 매우 매력적인

100) 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1962년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하여 탄생하였으며,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다. 미국의 국제무역, 상품무역, 직접투자 정책을 입안하거나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도하며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문, 협상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다자 협상 및 양자 협상 이외에도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도 담당한다.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다. (매일경제용어사전)

101) 이승신, 2016,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브리핑.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이미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 프로젝트(the Project to Promote Most - 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목표시장, 목표소비군, 제품의 범위 및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설정¹⁰²⁾하고 시장 수요, 혁신 R&D, 생산설계, 글로벌 마케팅 등 네 가지 부문에 대해 혁신 R&D 생산 플랫폼,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 환경 조성 플랫폼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특히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해외전시 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통합서비스, 산업이미지 제고)과 환경조성 플랫폼(시장정보, 인재육성, 성과확산)은 아주 구체적인 부문까지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으로 사례로 비추어 보건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상품도 신흥시장의 이러한 소비성향에 적합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여러 수출유관기관에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KOTRA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 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만의 신흥시장에 집중된 중소기업 진출지원전략의 벤치마킹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지원을 꾸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산업별 가치 사슬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사치사슬에 편입시키기 위한

102) 목표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며, 목표 소비군은 연평균 소득 8,000~1만 2,000달러 정도의 신흥 중산 층 가정으로 설정함. 또한 제품 범위를 동급 제품보다 제품 품질이 높은 시장의 가격 지배자와 제품가격이 동급 제품보다 낮은 시장 품질경쟁자로 설정했으며, 제품유형은 의식주·운송·기계·여가 관련 최종재 493개 제품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내 시장에서 조차 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⁰³⁾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먼저,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이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육성하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 협력관계의 형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103) 이옥동, 2013, 수출 현황 및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호, 73쪽.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수 있었던 것은 대만 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하여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기인한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GVC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생산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우선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 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해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지원책 모색¹⁰⁴⁾

해외생산 또는 해외투자가 수출과 대체 관계나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은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또 투자 단계나 투자의 성격 또는 목적 등에 따라서, 업종별과 기간별 및 진출국 등에 따라서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일방향으로 단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104) 신현수·민성환·김재덕·김정현, 2015,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산업연구원, 132쪽~134쪽

수익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생산이나 해외투자를 산업 공동화 문제라는 우려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가 수출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 현지국에서 시장 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제품에 대한 평판(reputation)이나 선호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는 국내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선진기술과 지식을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거나 습득할 수 있어 물리적 및 시간적 비용을 상당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신속히 국내 본사에 전파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케 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일조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현지 비용 상승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복귀 사유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 때문에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화에 성공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Born Global 창업 지원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세계경제는 가히 보호무역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우리 수출정책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력 상품 하나에 집중하는 단품 위주의 수출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메가FTA(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도 단품 중심이 아니라 상품 수출과 연계한 서비스 수출, 현지 투자 전략에 더하여 본 글로벌 창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창업 초기부터 세계무대 진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향성(Born-global)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참여율¹⁰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창업체질 역시 내 수형, 생계형에 머물고 있어 해외 진출형 기업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능하도록 ① 기술 및 아이디어 실현이 용이한 환경, ② 펀딩이 쉬운 환경(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엔젤·벤처투자 활성화), ③ 투자금 회수를 위한 M&A 시장이 활성화된 환경, ④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⑤ 지식재산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회수시장(M&A)의 활성화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한다.¹⁰⁶⁾

전 세계 약 7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사람들을 사교적인 만남으로 이어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거대한 글로벌 소셜 마켓으로 변해가고 있다. 본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록 해외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곳에 소셜 게임을 론칭한 해외 스타트

105) 주요국 수출참여율(%) : 한국 2.6, 독일 9.7, 미국 5.2 : 수출중소기업 수/총 중소기업 수, 한국은 2015년, 독일과 미국은 2013년 기준

106) 조빛나, 2017, 월드클래스 중소·중견기업에서 찾는 수출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19쪽.

업 ‘징가(Zynga, 씨티벨)’ 는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피버스튜디오, 고슴도치플러스, 파프리카랩등 다양한 회사들이 페이스북에 소셜게임을 오픈 하거나 서비스 중에 있다. 맥켄지가 “대기업은 정보획득 비용이 비쌀 때 이점이 있지만, 정보가 쉽게 이전되고 소비자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는 벤처기업이 경쟁력이 있다” 며 “미래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빠르고 혁신적인 작은 회사에서 나올 것” 이라고 전망한 것은 눈여겨 볼 직한 대목이다.¹⁰⁷⁾

글로벌 창업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초기부터 해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⁸⁾

글로벌 창업기업은 벤처창업과 글로벌화의 우성 DNA가 결합된 조직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지나 도달하게 되는 글로벌 발전 비전이 글로벌 창업이다. 벤처창업기업은 R&D부터 창출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글로벌 고객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도전적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글로벌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동태적인 성장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 글로벌 창업기업의 대열에 오르게 된다. 이들 기업은 잠재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장점들은 글로벌 창업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글로벌 창업의 주체는 벤처기업 및 혁신창업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정책은 정부의 직접개입보다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원방식도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창업정책 방향도 직접 지원보다 벤처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DNA를 자극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창업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성장을 독려하는 것을 강

107) 박희용, 2017,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IT 스타트업, KT 국제경영연구소, 2쪽.

108) 이영주·이동희·한창용·김승민, 2016, 글로벌 창업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218쪽~223쪽.

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글로벌 창업기업은 혁신기술 기반 제품, 도전적 기업가정신, 글로벌 고객지향성 등과 같은 필요 요건을 갖추어야 글로벌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창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간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창업의 길로 들어서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창업기업이 스스로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글로벌 창업기업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창업기업으로의 성장 DNA를 갖춘 벤처창업기업들을 엄선하여 간접 지원 중심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창업기업에 도전하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글로벌 발전단계에 도달하게 된 이후에는 정부지원에 비해 더욱 양호한 지원내용을 갖춘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글로벌 창업기업에 도달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창업기업들은 글로벌 창업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제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창업기업들이 부족 자원을 보완하고 글로벌 학습을 강화해 나갈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 구축 중심의 지원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 후 3~5년에 해당 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통적 수출 중소기업이 10년 이상에 걸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 어려움 중에서는 특허침해 대응, 글로벌 계약 등 벤처 창업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벤처창업기업들은 독자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해외 현지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전용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 및 해외 주요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벤처·창업기업 중 글로벌 성장 자질만 확인되면,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글로벌 파트너를 통한 구조적 어려움의 해소뿐만 아니라 신속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 및 글로벌화의 접점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해외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글로벌 창업활동은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관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특히,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들이 해외 주요 지역 내 전문 지원기관의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외국인 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내수 중심에서 세계 시장으로 창업기업의 무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⁹⁾

국제 경쟁력을 갖춘 Born Global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강국들은 외국인 인재대상 창업비자제도정비 및 내외국민 차별 없는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창업을 글로벌화 전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재학 대학교와의 연계로 창업지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경로 확충¹¹⁰⁾ 및 외국인 창업관련데이터 베이스 구축을통 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지원 시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유학생 창업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

109) 김보경, 201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6쪽~7쪽

110) 유학생 대상 창업정책 조사에서 창업자금이 가장 높은 수요(49%)를 표명(창업진흥원, 2011)

업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창업전용펀드 조성으로 유망한 외국인 창업기업 대상의 자본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창업현황 및 관련 통계 수집을 통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대상자 및 창업업종을 고려한 교육과정 세분화 등의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내·외국인 창업자간 교류를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관련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의 창업정보 획득 및 정착지원도 필요하다. 워크숍·대학세미나·멘토링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확충을 통해 외국인 또는 내·외국인 창업자간 창업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외국인 창업정보 매뉴얼화 및 상시적인 전문 멘토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창업 지원기관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창업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생산 분석을 위한 관련 통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¹¹¹⁾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생산 분석을 위한 관련 통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직접투자 통계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고 있지만, 해외 현지법인들의 경영 통계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 자체 집계 및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과 같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기업 통계 수집과 축적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통계 작성이나 시계열 DB 등이 매우 미흡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들의 경영활동 분석을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모집단 설명력은 상당 수준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계열의 일관성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해외 생산 관련 연구나 분석에 통계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1) 신현수·민성환·김재덕·김정현, 2015,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산업연구원, 134쪽~135쪽

특히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투자규모나 투자목적, 투자유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계열 DB가 상당한 정도로 구축되어 있지만, 해외 현지법인들의 경영 통계는 기업 통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관련 연구나 분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시 차원의 분석이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데 반해, 미시 차원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를 미시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시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현지법인들의 경영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통계 작성 관련 전문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확충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계 수집과 축적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에 자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단순 통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최창호, 2017, 경제전망보고서(미 트럼프 새 행정부 경제정책 영향 및 평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한국은행

최용환, 2017,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나지원, 2017, 2017년 세계경제전망 (1)미국, 여시재(Future Consensus Institute) 이슈

전은경, 2016,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공약과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강환국, 2017, 트럼프 취임사에 대한 주요국 반응조사,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최기산, 2017, 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Mark Zandi, 2017,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 s Economic Policies, Moody' s Analytics

Carlijin Prins, Björn Giesbergen and Hugo Erken, 2017, The (potential) impact of Trump on Asia Pacific, Economic Report, Rabobank

Shawn Tully, 2017, The Promise and Peril of the Trump Economy, Fortune

김재홍, 2017, 트럼프 취임 100일과 美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홍준표, 2016,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한동균,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브리핑

정민 · 조규림 · 오준범,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고희채, 2017,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문종철, 2016,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조규림 · 정민 · 오준범, 2017,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다 -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제현정 · 이근화, 2016,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심혜정, 2017, 미국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최강, 2016, 트럼프 정부와 한미 관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박은지, 2017,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점

김원기 · 윤여준,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이승신, 2016,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브리핑

문병기, 2016,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최환석·배정미, 2017,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김종상, 2011,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코트라 Global Business Report

김지현, 2017,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코트라 Global Strategy Report

이근태, 2017, 팍팍한 세계경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당분간 계속 어려운 무역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LG경제연구원 칼럼

조인우, 2016,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의 흐름과 시사점, 한국은행 글로벌 시리즈(1)

문병기·이도형,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의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이은민, 2016,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혜주, 2015,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최윤정, 2015,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인도 제조업 진출전략, 코트라 Global Strategy Report

민용기, 2016,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수·민성환·김재덕·김정현, 2015,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산업연구원

조빛나, 2017, 월드클래스 중소·중견기업에서 찾는 수출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장상식 · 김예민, 2013,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 국제 무역연구원 Trade Focus

박희용, 2017,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IT 스타트업, KT 국제경영연구소

이옥동, 2013, 수출 현황 및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1호

이정민 · 권오승, 2016,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문병기, 2017,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김진수 · 이창영 · 김용태 · 이우진,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창업경영연구원

이영주 · 이동희 · 한창용 · 김승민, 2016,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김보경, 201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이세경 · 박지현 · 민유지 · 박소영 · 박은경 · 임성아, 2017, 주요국의 수출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